

50%



남녀동수

Contents

VOL. 5 / 2018 지방선거 특집호



04 인사말
남녀동수는 권리입니다.
 • 이연숙 한국여성정의당 상임대표

특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6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 신명 한국여성정의당 사무총장

08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12 주목되는 당선자
 •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김소영 서울특별시 의원
 • 조선희 인천광역시 의원

20 우리의 과제
 • 홍미영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

여성의정 365

28 내일을 여는 여성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30 함께 걷는 길
 • 김관영 국회의원
 • 김해영 국회의원

34 젠더 거버넌스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8 정치여성
여성정치인 가족
 • 소신대로 해! 내가 지지 해 줄께
40 칼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참여
 •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를 읽고
 • 어우름의 음식
 • 저출산 시대의 세계 여성 정치인
 •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인물로 보는 여성
52 새로운 꿈을 펼치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54 여성 인물 열전
 최초 국회 여성상임위원장 김철안
56 보고 싶은 얼굴
 황산성, 김장숙, 손인춘

여성의정 소식

58 국회는 지금
62 법인소식
66 여성정치 뉴스

부 록

68 6·13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88 편집후기



표지 이야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교육감 2명과 여성기초단체장 8명의 사진을 앞표지에 실었다. 뒷표지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당선자 1,060명의 이름을 모두 실었다.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의당
발행일: 2018년 8월 31일
발행인: 상임대표 이연숙
편집위원: 진수희(위원장), 최영희, 신명, 김혜성, 이두아, 민병주, 유은혜, 황인자, 김삼화, 김순례, 추혜선, 김선임, 이미래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전화번호: (02) 784-0531 / 788-3341~2
팩스: (02) 788-0717
이메일: kwpn2013@daum.net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28
간행물 허가번호: ISSN 2466-0884
홈페이지: www.kwpn.co.kr
디자인·제작: ㈜씨마스커뮤니케이션
ISSN: 2466-0884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한국여성정의당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녀동수는 권리입니다.



이연숙
 • 16대 국회의원
 •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사상 최대의 폭염 속에서 한국여성의정이 『여성의정』 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호로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정치인 1,070명의 얼굴과 이름을 표지와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의정』이 여성정치인의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2% 127명에 불과했던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제7회 선거에선 26.4% 1,070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치에서 여성은 소수입니다. 여성지방의원은 아직도 임계점(30%)을 넘지 못하고 있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226개 지역에서 여성이 1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당헌당규에 여성 30% 공천 규정이 있지만, 여성 정치대표성을 견인할 만큼 파괴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남녀동수정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멕시코에 이어 우리보다 남성중심사회인 일본도 '정치 분야에 남녀 공동참여 촉진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남녀동수 개헌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남성중심 정당의 보수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남녀동수정치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리의무의 실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여성정치세력화의 첫 신호탄이 되었던 것처럼 2018년에는 남녀동수 정치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개선은 미흡했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성당선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의미 있는 수치이지만 지방선거역사가 30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광역단체장에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 두 명의 여성교육감 탄생을 발판으로 다음 선거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며 6·13 선거를 되짚어본다.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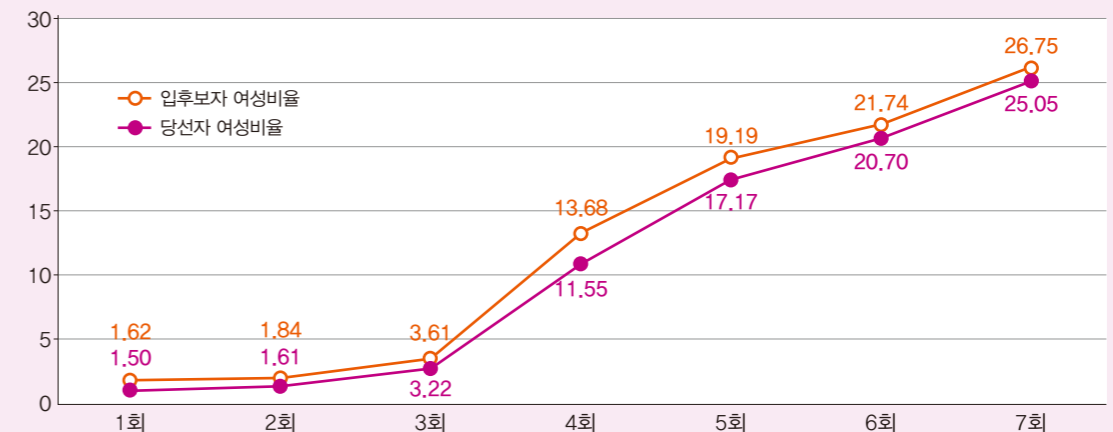
주목되는 당선자

-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 김소영 서울특별시 의원
- 조선희 인천광역시 의원

우리의 과제

- 홍미영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

역대 지방선거 입후보자 여성비율과 당선자 여성비율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 지방선거의 어제와 오늘 —



신 명
 • 17대 국회의원
 •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

2018년,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70년을 맞았다. 1948년 5월10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첫 참정권을 가진 이래 여성은 19번의 대통령선거, 20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8번의 지방선거에 참여 했다.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남성만으로 출범했다. 다행히 1949년 보궐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 1명¹⁾의 당선으로 여성 의회정치가 시작되고, 67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51명(17%)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지방선거를 보면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실시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서 부산시의원 여성 1명²⁾을 시작으로 66년후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1,068명 (26.8%)의 여성을 배출했다.

70년 동안 늘어간 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성은 세계 144개국 중에서 90위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 83%, 광역단체장 100%, 기초단체장 96%, 광역의회 의원80.6%, 기초의원 69.2%가 남성이다. 인구의 절반,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남성이 있다.

세계는 동수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법률 제·개정 하는 등 남녀동수실현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번선거를 보면서 우리도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 - 아직 갈 길은 멀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³⁾에서 여성은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54명, 기초의회의원 72명이 당선, 전체 5,758명 중 127명으로 2.2%에 불과했다. 2006년 4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 제도가 신설되면서 327명의 여성이 비례대표로 당선, 여성당선자가 전체 3,872명 중 529명으로 13.7%가 되어 10% 대에 진입했다.

2014년 6회 선거는 총 3,952명 중 21.3%인 854명이 여성이었다. 이때부터 여성 지역구위원이 비례대표위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8명(3.5%), 광역의원 160명(19.4%), 기초의원 900명(30.8%)으로 여성은 3,993명 중 26.8%인 1,068명이다. 여전히 광역단체장은 없고, 기초단체장은 8명에 불과하고, 아직 여성 1명밖에 없는 기초의회가 44개나 된다. 다행히 교육감 2명(11.7%)이 탄생하고 기초의원이 900명으로 임계점 30%를 넘어섰다. 이같이 여성의 꾸준한 증가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신설, 기초·광역지역구 후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되게 하는 지역구 할당제 신설 등 제

1) 1949년 1대 국회 보궐선거로 안동에서 당선된 임영신 의원을 시작으로 20대까지 여성국회의원은 209명이다
 2) 1952.4.25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의원으로 최초여성 의원 허무인 의원이 당선됐다
 3) 지방선거는 1952.4.25 시·읍·면 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

(단위: 명)

회	연도	합계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총원	여성	%	광역	기초	계	지역구	비례 대표	계	지역구	비례 대표
1	1995	5,758	127	2.2	0	1	54	12	42	72	72	-
2	1998	4,428	97	2.2	0	0	41	14	27	56	56	-
3	2002	4,414	142	3.2	0	2	63	14	49	77	77	-
4	2006	3,872	529	13.7	0	3	89	32	57	437	110	327
5	2010	3,991	745	18.9	0	6	113	55	58	626	274	352
6	2014	3,952	854	21.4	0	9	113	58	55	732	369	363
7	2018	3,993	1,068	26.4	0	0	160	98	62	900	526	374

도개선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에서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경선 등에서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았다. 그럼에도 여성 후보자의 당선 비율(기초의회 여53.%, 남46.2%)이 남성보다 앞서 정당은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국민은 여성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당이 내부규정을 이행하고, 공천제도 개선으로 여성 진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변화의 시작 - 남녀동수 정치로

한국의 정치, 특히 지역정치는 남성 중심이다. 학연, 지연과 계파로 묶여 남성 중심의 아성을 이루고 있다. 속칭 '아재 정치', '오빠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택된 여성정치인 역시 기존의 권력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는 남녀동수 정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어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일본의회는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을 정당에 촉구하는 '정치분야에 남녀공동참여

촉진법률'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멕시코는 2014년 헌법 개정에서 동수공천 제도가 도입되고 2018년 7월 1일 선거에서 여성이 상원에 51%, 하원에 49%가 당선됐다. 우리나라도 2018년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부산·대구·경남 광역의회 여성 의장이 당선됐고, 기초의회도 곳곳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의정도 6·13 지방선거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여성의정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울산 교육감을 비롯 각 지역에서 여성당선자를 내고 여성정치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변화는 시작해야 하고 시작은 책임이다.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 50명이 있고, 지방의회에 1,068명의 여성이 있다. 이들이 뿌리에서부터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남녀동수정치를 위해 헌법 개정과 함께 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책무를 비롯한 여성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담은 새로운 법제로 '남녀동수법'을 제정해야 한다. ♡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지상중계

여성당선자 수는 늘었으나 질적인 개선은 미미 정당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제 마련이 절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 기초자치단체장 8명(3.5%), 광역의회의원 160명(19.4%), 기초의회의원 900명(30.8%) 등 1,068명의 당선자를 냈다.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6월 26일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분석, 수적인 증가는 의미 있지만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여성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 기초자치단체장 8명(3.5%), 광역의회의원 160명(19.4%), 기초의회의원 900명(30.8%) 등 1,068명의 당선자를 냈다.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6월 26일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분석, 수적인 증가는 의미 있지만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남성 초과인대표성 그대로 유지

발제를 맡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발표를 통해 선거결과를 두고 '한국사회의 남성초과인대표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소장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국회의원 83%, 광역자치단체장 100%, 기초자치단체장 96%, 광역의원 80.6%, 기초 의원 69.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7회에 걸친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113명이 배출됐으나 여성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1604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29명(1.8%)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17명의 교육감 중 여성이 처음으로 2명 당선된 점과 1000명이 넘는 여성정치인이 탄생해 여성정치인 인력풀이 확장된 점이다. 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여성들은 후보자 비율보다 당선자 비율이 더 높아 당선 경쟁력을 문제 삼아 공천을 꺼리는 것은 득권을 가진 남성 집단들의 명분 없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소장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수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과 정당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제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

김소장에 이어 발표에 나선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은 "광역단체장 후보 17명은 물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11곳에서도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못해 시민단체로부터 '더불어아재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이 29곳까지 가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미투 운동, 성평등 개헌 등 큰 이슈들로 여성계의 역량이 다소 분산되어 있었다."고 지적한 권국장은 "중앙당을 비롯한 대부분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성 후보들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은 당의 저조한 지지율로 여성당선자가 76명 중 9명에 그쳤으며 여성출마자에 대한 중앙당의 재정적·전략적 지원이 미비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정의당은 공천 후보 중 여성 비율과 여성당선자 비율에서 다른 정당보다 높았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른 여성추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여성추천 보조금 등 여성정치인 진출을 위한 보장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표로 한 할당제 고려도 필요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은 “미투운동과 함께 성평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페미니스트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있는 지금 지방정치에서는 오히려 퇴행이 일어났다”며 “남성중심인 카르텔 안에서 여성정치인은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진입한 여성정치인들도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기존 남성권력을 따라가게 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유순희 부산여성신문대표는 “여야 정치권은 이기는 선거에만 급급, 여성공천확대방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기초의회 영역을 제외한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 올라갈수록 역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섬숙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대부분 당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남녀동수는커녕 공천률 30%에도 못미쳤다.”고 지적한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대표는 여성·청년을 50% 공천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해 대구광역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화 전 대구시의원 역시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정당의 공천문제를 지적했다.

진주원 여성신문기자는 “지금까지 여성신문만 외쳤던 여성과소대표성 문제에 대해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천부터 선거결과까지 진보성향매체는 물론 보수매체, 경제지, 지방지들까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두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헌법개정이 이뤄지면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받는 자리는 선출직이고 보장을 받는 정도는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공천단계에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및 당선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이 경우 중선거구제가 필수적인 제도적 보장이므로 그 확대를 요구하는 등 변수를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



유순희
부산여성신문대표



이섬숙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회장



이재화
전 대구시의원



진주원
여성신문기자



김종두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녀동수 의회구성을 목표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의당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7 세계 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 격차 수준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8위이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86위다.”며 “한국 여성정의당 공동대표로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은 지난 5월 16일 일본에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서의 남녀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만 남녀동수를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으나 거기까지였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신명 한국여성정의당 사무총장은 “한국여성정의당은 여성 정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법·제도의 개선과 교육을 통한 여성 정치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목표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필요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정당 공약집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 지키고 발전

학교 자율경영 혁신 통해 새 바람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거는 기대는 크다. 꾀직한 발걸음으로 교육현장과 가까이 있었던 강교육감은 특유의 따스함으로 교육의 모든 주체들을 품어낼 각오이다.

❶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진 대구에서 첫 여성교육감이 됐다. 당선 소감과 각오를 듣고 싶다.

지금까지 대구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구의 행복역량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대구 시민들께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는 신뢰받는 대구교육청, 교육감이 되겠다.

❷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치며, 누구보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교육으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저임금과 불평등에 힘들어하는 일하는 여성의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균형 잡힌 양성평등의 시각과 문화를 갖추게 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교에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직원의 조직 문화, 학교 규칙이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 정책에서 양성평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실천하겠다. 연수, 수업 및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 교육, 가정에서의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 교육주체들이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❸ 4차 산업혁명시대. 선거 공약으로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인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직업의 모습 또한 많이 바뀔 것이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산업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미래역량교육'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창의·융합교육과정, 소프트웨어교육,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코칭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인재로 양성하겠다.

❹ '워킹맘'들의 어려움이 많다. 학교현장에서 워킹맘들을 도와 주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정책이 있는가?

워킹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마음 편히 일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직업을 가진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서 저녁 돌봄 유치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유치원을 40여개에서 100여개로 늘일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앞으로 5년간 학교 돌봄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1~3학년 전체학생의 25% 이상(약 15,70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❺ 대구교육에 가져올 강은희표 변화와 혁신은 무엇인가?

그동안 대구교육공동체가 열심히 해왔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지역 간 교육 격차, 사교육비 부담, 교권, 청소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과제를 교사, 국회 교육위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다품교육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희망교육으로 풀어갈 것이다.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정착시키겠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나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는 따뜻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교실에서 아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선생님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교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 경영'이라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대구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❻ 교육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월등히 많은 분야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는 줄어든다. 특별한 여성인력활용 방안이 있다면?

현재 대구교육청 소속의 여교사는 초·중등을 합쳐서 전체 교사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79%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전문직에 진출한 여성관리직의 비율은 약 49% 정도이다. 대구교육청은 권고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가족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육아 휴직,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을 이용하도록 해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휴직 후 현장 복귀 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격 연수, 현장 복귀 멘토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2018 제7회 대략 창의 체험 한마당
강은희 교육감은 7월 21일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2018 제7회 대략 창의 체험 한마당'에 참석, 관련 행사를 참관하고 행사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 인권친화적인 학교 돼야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교육감만큼 교육현장 곳곳을 누빈 인물도 드물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무상교육과 성평등교육의 시동을 건 노교육감은 실질적인 정책에 주목한다.



교육 현장은 여성인력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여성교육감은 처음으로 등장했다. 첫 여성교육감으로서의 각오를 들고 싶다. 지도자 한 명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으로서 여성 교사나 여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교육계는 여성이 70%이다. 여성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성평등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는 교육감이 되고자한다.

교사로 시작해 교육위원, 부모교육협동조합, 도서관대표, 노동인권센터대표, 급식연대 등 교육현장을 두루 누볐다. 노옥희가 보는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교직생활에만 머물렀다면 학교 밖에서 교육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외부자의 관점, 시민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관점이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데 도움이 됐다. 교육계가 폐쇄적인 면이 있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

과 후 학교 등에 대해 공부만 하게 하는 무리한 교육이라고 보는 외부의 시선을 인지하지 못한다. 학생인권문제 등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도 민주시민의식을 갖추어 교육에 임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곳으로 바뀌어 상식에 어긋난 억압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완전한 무상교육을 강조했다. 무상교육시대로 가기 위한 정책은? 2학기부터 추경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수학여행비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좋은 교육을 하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송철호 울산시장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서울도 서울시 예산으로 각 학교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유명하고 인근에 원전도 있다. 최근 지진도 찾아서 '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으리라고 본다.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울산은 원전과 화학공장에 지진까지 발생해 내진설계, 화재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기준이 잘 적용되도록 안전총괄 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전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고 시에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도록 하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석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고 있다. 24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만 스쿨존을 갖추고 있다.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 GMO,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도 생각하고 있다. 안전 체험관 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해 현장교육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학교 내 성범죄, 폭력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별다른 징계 없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들이 있다. 부패비리에 무관용을 주장한 교육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성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감시가 되도록 열린 교육, 참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문제 발생시 대상자의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의지를 갖고 고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시정 되도록 할 것이다. 성범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 교육계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2018.7.17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교육 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성차별이나 여성 혐오에 대한 표현이 교실에서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방안은?

성평등은 민주시민교육 내에서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 평화,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평등 등의 소양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창의력체험 교과 과목 내 교과과정 중 하나로 편성돼 실효성이 없다. 생활 속이나 모든 과목 내에 성평등 의식이 녹아 있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르게 하면서 성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교육에서 해소되도록 할 것이다.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정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학생자치가 중요하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에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다. 법을 개정,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운영위가 되어야 한다. 당장 학생 참관이 가능하게 해 학생문제를 다룰 때는 학생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회에 예산을 지원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볼 것이다. 스펙으로만 이용하는데 그치는 학생대표가 아니라 실제 대표성을 가지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촛불 집회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 하는 것을 보았다. 시대 분위기에 맞게 학생의 올바른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여성의정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과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며,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

선출직 진출 여성이 자신감을 갖도록 혼자보다는 함께 모여서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좌내용도 좋았지만 동료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았다. 지속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천권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장치도 필요하다. 또 당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교육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민과 연대해 지속가능한 은평



김미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제4,5대 은평구의원
• 제8,9대 서울시의원

인수위 대신 '은평 내일 준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실속형 인수작업을 시작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선 7기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 은평구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업무인수보고회'에 참여하며 구청장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민원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행정편의주의를 없애고 업무의 윈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피력한 김구청장은 '주민청원제도'를 제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은평정책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며 주민이 주인인 은평 만들기 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김구청장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극적으로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되면서 평가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재심을 신청하고서야 가까스로 경선에 참여했다. 그 경선에서 2위와 20% 이상 큰 격차를 벌여 1위를 차지, 은평구청장 후보가 되었고 당선의 영광을 얻었다.

재선 은평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김구청장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몸소 체험했고 스스로 이를 극복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눈에 띄지 않는데 7급 이하는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여성인력의 현주소를 진단한 김구청장은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자리에 은평구 최초로 여성을 임명했다. 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는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공형 일자리, '은평 jobs' 등을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한다는 야심이다.

여성 최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구청장은 성큼 다가온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은평을 통일의 상상기지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각오다. 대륙으로 향하는 경의선 출발지인 수색역세권을 조기 개발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상상하는 통일박물관 건립 등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의 생각을 담고 함께하는 구청장, 민주적 참여행정의 새로운 시도,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은평구의 모습이 기대된다. 🍎

서초형 '생활행정'의 꽃을 피우겠다



조은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재선)
• 전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자유한국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된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비결은 주민들이 평가해준 '일 잘하는 구청장.'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득표율 34.8% 보다 17.6% 포인트 많은 52.4%의 득표율을 받았다. 4년 전 조선 득표율 49.8% 보다 2.6% 포인트 더 늘어났다. 조구청장의 롤 모델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메르켈의 '무티행정'과 같은 '엄마행정'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산 것이 재선의 비결이기도 하다.

조구청장의 엄마행정은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삶에 도움 되는 '생활행정'이다. 여름철 피야별을 가려준 서리풀원두막,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준 서리풀이글루, 따뜻한 온돌꽃자리의자, 재활용 수거함인 서리풀컵 등은 조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시행된 생활행정의 대표 사례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행정 역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빨간 전기차의 운전대를 잡고 서초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목소리라면 흘려듣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하고, 보내 온 문자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청이 이렇게 내 생활에 도움 되는구나' 하는 행정의 신뢰가 싹 트기 시작한 것.

청렴 1등, 공약이행 1등, 기초단체장 역량 주민만족도 1등, 알뜰재정 1등 등 차곡차곡 쌓아온 행정성과는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다졌다. 서리풀터널, 성뒤마을 등 수십 년 묵어 난마처럼 얽힌 껍질한 현안 해결 능력도 뛰어난다는 평을 받았다.

조구청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들은 내 삶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앞으로 주민 한 분 한 분 걸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민 니즈에 맞춘 '생활행정'에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을 위한 가교가 되겠다



김소영
• 서울특별시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사명을 위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비례대표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김소영 의원은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소속당의 참담한 결과에 당선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잠을 설쳤던 김의원은 국가대표 체조선수출신이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서울올림픽을 목표로 삼고 훈련하던 국가대표 시절 느꼈던 태극기의 무게로 비교했다.

김의원은 30여 년 전 기계체조 훈련 중 사고로 사지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체육인이 아닌 장애인이 됐다.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이 참으로 힘겨운 일임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꿈만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더욱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장애를 통해 배웠다고 토로한다.

“모든 당을 통틀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유일한 장애인이며 최초의 중증 장애인 시의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의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약자들과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김의원은 약자를 분리 지원하는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어우러지는 통합형 복지를 강조했다. 스스로가 창구가 되어 의회와 관련 부처가 약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낮설고 서툴지만 장애인과 체육인으로서 경험을 살려 임기 동안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며 장애인과 약자를 위한 대변인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이 펼칠 의정활동은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민의 동료로



조선희
• 인천광역시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 전 인천여성회 회장
• 전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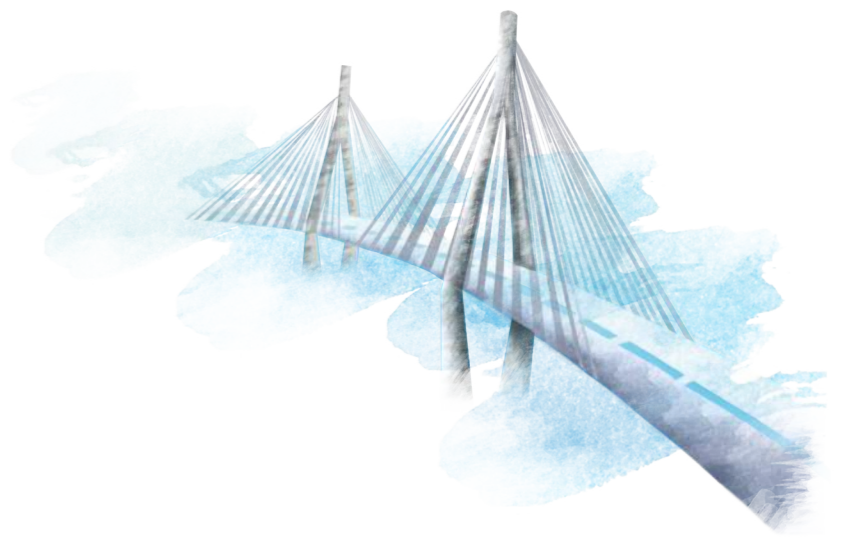
조선희 인천시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의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된 데다 시작부터 여성, 노동, 청소년,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슈퍼우먼 방지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만들 수 있게 요구하겠다는 구상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당 소속 동료의원은 없지만 그 자리에 시민들이 있다” 고 강조하는 조의원은 “시민정책 멘토단을 구성해 함께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 정의당의 공약이기도 한 ‘5무(無) 5유(有) 약속’을 천명하기도 했다.

‘5무 약속’은 외유성 해외연수, 선심성 예산편성, 이권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영리 관련 겸직활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5유 약속’은 표결실명제, 투명한 예산심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시단 제도화, 의정활동 성과·계획 보고 등으로 풀뿌리 정치의 신호등 지키기와 같은 다짐들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조차 ‘찍어봐야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현장에서 “찍어줘야 바뀔 것”이라고 역설한 끝에 인천시의원 정의당 비례대표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조선희 의원.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치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믿음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남성 카르텔을 넘어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본선보다 더 힘든 싸움, 경선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다”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토로하는 말이다. 여성의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결과는 여러 번 나왔지만, 여성은 공천과정에서 쉽게 밀려난다. 2018년 지방선거 여성 ‘후보’ 비율은 고작 16.3%(비례제외)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던 인천의 경우 민주당은 선출직 시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단 한 명의 여성후보도 내지 않았다. 반면 ‘협지’인 부산에서는 여성정치인이 약진했다. 이는 정치권의 오래된 경향이 다. 나오면 붙는 지역은 여성들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진다. 접전이나 패배가 예상되는 지역 시·도당은 여성후보를 내민다.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를 공천한 지역은 218곳 중 단 11곳. 그중 부산이 4곳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단 한 명의 여성후보도 내지 않았다.

여성 정치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이번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의 숫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당선여성 1068명 중 기초의원들만 900명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광역단체장은 여전히 아무도 없다.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도 비례적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비례 의원들은 당 내 권력이 약하다. 여성들이 비례직을 거쳐 선출직으로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1회용으로 활용될 뿐이다. 재선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도 못한 채 밀려나곤 한다. 많은 남성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순조롭게 공천되면서 성장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2018년 인천의 경우, 기초를 거쳐 광역의회로 간 여성의원은 아무도 없다. 여성 지방의원 50명 중에서 재선의원은 10명뿐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여성의원들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홍미영
• 17대 국회의원
• 민선 5·6기 인천부평구청장

여성전략공천에 쏟아지는 공격

나 역시 본선보다 경선이 큰 문제였다. 1991년 초대 기초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2대 3대 광역의원으로서 연이어 당선되고, 비례경선을 통과해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인천 최초 여성국회의원이 되었다. 2011년 민주당으로는 전국 최초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8년간 부평구청장을 역임했다. 단 한 번도 본선에서 떨어진 적 없이,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한 드문 사례라고 하지만, 늘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층 거칠어진 여성혐오까지 가세하여, 여성전략공천의 물망에 오르자마자 마녀사냥이 불붙었다. 남초사이트와 SNS에서 공격이 쇄도했고 ‘폐미질하지 마라’ ‘남자 거세하는 메갈이나’ 라는 욕설 전화와 문자가 왔다. 위키백과에서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은 경력만 남기고 모든 경력과 소개글이 삭제되기도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 동등함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지만, 당은 전략공천의 의의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성후보에게 가해지는 공격들을 그저 방치했다. 전략공천은 29곳까지 가능했으나, 단 1곳만 여성 전략공천을 했다.

두꺼운 남성 카르텔을 넘어설 희망을 찾아

모두 알고 있듯이 한국 정치, 특히 지역정치는 지극히 남성 중심이다. 학연과 지연과 계파로 묶여 끼리끼리 가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공고하다. 현 정당정치 구조 안에서 지역위원장이 가진 권한은 매우 큰데, 지역위원장 중 여성의 비중은 아주 적다. 인천의 13개 지역위원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기존 정치판에서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떨어진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당시 성평등 정치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희망을 걸었다. 비례 홀수번호는 여성에게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우리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으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불평등한 일이 있으면 제재하고 최고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다르게, 현재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상당 금액이 본디 당의 경상경비로 부담해야 할 여성당직자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다. 매년 여성 30% 공천 강제 조치 등 법개정이 발의되지만 남성의원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과 의회에만 변화를 기댈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경선 중 여성혐오도 겪었지만, 각계각층 다양한 여성들의 가슴 뜨거운 지지와 연대도 함께 느꼈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공천을 위해 뛰었던 분들도 있었고, 단체나 조직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다. 남성중심 정치에 대한 비판도 어느 때보다 널리 공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더 좋은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모든 평등의 출발인 성평등’을 향해 가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기초의회 남녀동반선출제 논의시점 정당의 장기적인 여성정치인 발굴 필요

7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워낙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고 선거전에도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 직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았다. 이 맥락에서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고 여성을 보다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성정치참여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한다.

7대 지방선거를 보면 1991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이 1.4%에 지나지 않았지만 8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여성후보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25.16%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1.2%였던 것이 이제는 28.8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비례대표를 제외하더라도 7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후보의 비율이 18.65%에 이른 것을 보면 그간에 여성정치인의 풀이 상당히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선자의 비율을 보면 1991년 지방선거에서 1%에도 이르지 못했던 여성당선자의 비율은 이제 29.2%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각각 30.75%와 20.7%에 이르게 되었다. 여성후보의 비율이 점증하고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6년 4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비례대표가 신설되면서 여성후보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당선자도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가 다시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공직선거법 47조 5항¹⁾의 신설과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나 광역의회 후보에 반드시 여성을 한 명 공천해야한다는 규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강제가 정당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후보가 많이 공천되면서 여성의 당선이 많아졌다.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47조 5항은 "정당이 임기만으로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로 되어있다.

여성공천이 많아졌고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는 점에서 여성정치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광역단체장은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모두 6명으로 전체 71명 가운데 8.45%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여성후보가 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숫자이다. 출마한 여성후보는 서울특별시시장 후보로 3명, 부산광역시시장 후보로 1명, 세종특별시장 후보로 1명,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1명이 출마하였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송아영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군소정당후보였다. 이런 점에서 당선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광역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정치발전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한번의 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야하고 이번 선거처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8장의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야한다. 그만큼 유권자는 많은 후보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해야하는데 사실상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처럼 지방선거가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유권자들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스스로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은 정당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정당투표성향이 높다는 나타났다(2018년 여론조사). 이렇게 볼 때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여성을 공천하게 되면 여성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지지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정당에서의 여성공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 정당에

서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여성들 대부분은 지방정치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다. 은수미(성남시장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을 경험하였다. 유럽의 여성정치가 안정되고 여성들의 세력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단체장들의 경우에도 지방에서의 선출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한 여성정치인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여성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례대표를 통한 정치의 진입이 여성정치발전의 첫단계였다면 이제는 여성정치인들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선출직에 도전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중요한 선출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여성정치세력화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영입을 통해 일회성의 여성정치인 등용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정당과 뜻을 같이 하고 정당과 함께 해온 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방정치에 그들을 공천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5월 일본은 남녀동수후보제를 입법화하면서 프랑스에 이어서 남녀동수후보를 법으로 정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특히 기초의회 선거에서 남녀동반선출제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국회에서 법으로 발의된 적도 있다. 이번 선거를 볼 때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20%에 조금 못미쳤다. 이것은 기초의회에 출마하는 여성후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도 기초의회에서의 남녀동반선출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확대, 당선인의 증가에서 제도가 가진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여성정치발전에 있어서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기초의회에서 남녀동반선출제의 도입은 한국 여성정치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

한국여성의 문제 정치적 대표성 높여야 해결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800만 시대'가 운위된 지 이미 오래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위가 불안정할뿐더러 임금도 적게 받는다. 대체로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경험과 능력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할지라도 그 대가를 받을 때면 항상 심한 차별을 맞아야 한다.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문제라도 제기할라치면 그나마의 지위마저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명백히 헌법(11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분 차별에 해당한다.

한국 여성들도 불공정함을 일삼에서 늘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성의 65.3%보다 높다. 하지만 여성이 상위 직급까지 진출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7년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에 불과했다. 그 수치가 40%에 달하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유리천장'의 존재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여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공산도 더 크다. 대부분의 통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0%~20% 가량 높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남성과의 임금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에 64.8%였던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17년에도 67.2%였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듯) 육체노동이 아닌 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여성은 좋은 일자리 잡기가 힘들고, 고위직에 오르기가 더 어려운 걸까? 혹시 다른 이유보다는 그저 성(性)이 여성이어서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변수로서의 성별 차이를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킨 조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필기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뽑을 경우 합격자 남녀 비율을 보면 된다. 이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뒤지는 법이 별로 없다. 공직자 선발의 경우 7급과 9급뿐 아니라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시험 등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40%~60%를 점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엔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사법시험으로 판검사를 임용하던 시절엔 2000년대 초부터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섰다. 비슷한 양상은 로스쿨 체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률은 여성이 평균 28%로 남성의 24%보다 높았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도 여성 합격률이 우세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곱 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 가운데 성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던 건 무려 다섯 차례였다 (법률저널 2018년 7월 23일).

여기까지 보면, 대다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다수 남성에 비해 열등한 까닭은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옳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향하여 쳐놓은 인위적인 장벽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바로 헌법(11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 차별의 문제이다.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인 장벽 혹은 차별을 깨거나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고 있는 차별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들의 선호와 이익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책 등을 충분히 제공할 때 해결된다. 성 차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가 나서서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제도적 해법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즉 여성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여 중앙과 지방의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선거에서 가급적 많은 여성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둘러싸고 있는 불공정 문제는 오직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히 높아질 때 해소된다는 정치경제학의 일반론과 맥을 같이하는 처방이다.

궁극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2015년 1월 기준 OECD 평균은 27.8%였으나 한국은 16.3%에 불과했다. 상기한대로, 한국 사회엔 여성 앞에 유난히 많은 장벽이 놓여 있다. 선거정치에서 작동하는 장벽들도 많이 있다.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공고화되고, 종국엔 제도화까지 된 사회적 장벽들이다. 성질상, 개인이나 소집단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법, 규범 등의 개혁으로만 깨지거나 낮춰진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가 넘는 국가의 80% 이상이 여성할당제를 포함한 특별한 제도 혹은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도 이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남녀동수를 헌법적 규범으로 천명하거나 법제화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지방정치 활성화와 해외사례의 시사점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지난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여성은 광역의회의 19.4%, 기초의회의 30.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적어도 의회의 측면에서는 꾸준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상황은 매우 다르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선거의 경우 여성은 지방선거 실시 이후 한 차례도 선출된 적이 없다.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선거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중앙정치 뿐 아니라 지방정치 차원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선출직 참여 기회가 낮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 지방선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이유는 왜일까? 첫째,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하는 자치단체장 선거는 공천이나 선출 과정에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여성할당제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다. 둘째, 정당이 선거경쟁력 등을 이유로 여성 후보 공천에 소극적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선거 후보에 여성 비율을 높였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정당이 허용되지 않고 공직선거 후보 추천권이 사실상 전국정당으로 제한된 정당법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여성이나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렵다.

우리 지방정치는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지방선거가 군소정당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계진출 통로가 되고 있는 해외사례와 대조적이다. 영국이나 독일 등 다수국가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지방정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계진출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정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나 정치단체, 지역정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은 정치단체로 등록하면 정당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가나가와현의 생활협동조합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가나가와 네트워크는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한 정치단체로 1987년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공천하여 당선되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시민단체로서 지방정치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라면 지방정치의 또 다른 주체는 지역정당이다. 오사카 유신회, 동경 도민퍼스트회는 대표적인 일본 지역정당들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개혁을 주장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전국정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동경 도민퍼스트회는 동경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가 창당한 지역정당으로 2017년 동경도의회선거에서 후보 대부분이 당선되면서 여당인 자민당을 누르고 도의회 제1당으로 부상했다. 지역정당들은 지방분권, 조세자율성, 주민세 인하 등 지역의 이슈를 쟁점화하면서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단위 정당으로 제한되어 있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어야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 정당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의 중심을 수도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측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도 시민단체나 유권자단체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다양한 정치단체들의 선거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시장,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최근 도쿄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 여성이 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こいけ ゆりこ)는 2016년 실시된 도쿄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최초로 도쿄도지사로 선출되었다. 파리 최초의 여성시장인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2014년 3월 사회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2016년 실시된 로마시장 선거에서는 신생 정당인 오성운동 후보로 출마한 비르지니아 라지(Virginia Laggi)가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들은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부패 청산과 적자재정 축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공약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당선된 여성 시장들은 우리 여성 정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이케 도지사는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 이달고 파리는 10년 이상의 부시장 경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환경, 교육, 복지, 건강 등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이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면서 여성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당 차원에서 개혁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안으로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공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당들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다. 📌



2014년 파리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이달고 시장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 국민통합으로 가는 맞춤형 보훈서비스 강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예비역 중령출신으로 장관급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피처장은 보훈복지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며 국민통합을 일궈낼 보훈제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 중령으로 남성 예비역 장성이 독식해온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지난 1년 동안 펼쳐온 남다른 정책과 결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2018년 보훈 예산이 대폭 증가해 사상 처음 5조원 대에 진입했다. 덕분에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 지원하는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을 신설했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올해 신설했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수익사업 비리 의혹 등으로 위상이 실추된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단체 혁신 TF를 만들어 수익사업 개선 및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신뢰받는 단체상'을 정립하도록 했다.

☞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독립운동 현장에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유공 포상자 가운데 여성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여성은 299명으로 전체 독립유공자의 2%도 되지 않아 역할과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독립운동 공적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여성은 시대 상황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상이 자료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여성 심사대상자의 활동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인사의 일기나 회고록, 수기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독립운동에 참여한 가족의 정황자료 등도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전문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파격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 같다. 국민 화합을 이루는 보훈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훈기념행사와 현충시설 등을 활용, 국민들에게 독립-호국-민주의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기념행사가 정부 주도의 정형화된 기념식으로 진행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부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기념행사로 거듭나도록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유공자의 감동적인 사연을 공연으로 재현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완공되면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미래세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현역 시절 여군의 권익수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험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30여년의 군 생활동안 부대 중대장과 항공학교 학생대장을 거치며 군 조직을 지휘했던 경험이 보훈처를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뜻한 보훈'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중심,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보훈을 펼치게 된 바탕이 됐다. 과거 우리 군대는 남성위주의 조직이었고, 여군은 소수자였다. 여군의 권익 수호 활동 경험들은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여 민원과 갈등이 많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제도 중심이 아니라,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경청하고 보살피는 '보훈가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취임당시와 현재 보훈처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정치권과 여성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여성공무원 고위직 확대」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보훈처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취임 당시는 5.8%에 불과하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현재 10%(20명 중 2명)로 늘어났다. 연말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한명을 더 임용할 계획으로 있어 15%로 확대될 것이다(20명 중 3명). 우리사회의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도 점차 확대돼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여성계 등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앞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펼칠 보훈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국가유공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우정책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국립묘지 의전단을 신설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명예로울 수 있게 예우하고 있다. 연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안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때 징병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심사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위문하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1명도 되지 않는 0.97명.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이 한창이다. 여성의정 5호는 다둥이 아빠 김관영, 김해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법을 고민해봤다.

저출산 문제, 긴 안목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김관영

국회의원

- 19, 20대 국회의원 (전북 군산시, 바른미래당)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난 2월 7일 출범한 국회포럼 1.4의 공동대표로 국회차원의 저출산 관련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 실업, 소득정체와 소득양극화, 주택문제, 가정형태의 변화, 남녀 불평등 문화, 개인주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화적 문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에 쌓여온 부조리와 불합리가 낳은 결과라고 본다. 국민들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6년 이래 약 100조원을 퍼붓고도 변곡점을 그리지 못한 출산정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마련했다는 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저출산 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은 없고, 이전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재정 투입에만 집중하고 있다.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야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 사교육비와 주거

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 독박육아에 대한 공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인식한 직장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들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와 시민단체가 긴 안목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 경험을 공유하기위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 1.4>'에 참여하고 있다.

📌 **기존의 출산율 정책들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직종과 근무지, 근무 형태에 따라 제도 수혜의 격차가 큰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과거 정부들의 대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제도 형평성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 이용 여부다. 예컨대, 올해 남 성육아휴직급여 지급자가 전년 동기 대비 65.9%가 증가했지만, 전체의 약 60%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제

도로 보장하는 것과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부담을 느끼거나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부 비용이 지원 된다 해서 정부의 방침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체는 많지 않다. 2040세대가 차별 없이, 현실성 있는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정비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 **아들 셋을 둔 아버지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들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이가 셋이면, 사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셋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진 많은 부모들의 걱정일 것이다.

부모 중 한명이 육아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경력단절이후에 기존의 경력과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현실 때문에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자녀 한명 이상을 낳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가정 내 성평등 의식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과 군산을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성인지와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많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가사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들들에게 가사는 물론이고 남녀간 고정화된 성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한다.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견 발표 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난임휴가도입법안도 발의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난임 치료를 위해 30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난임휴가도입법'을 대표 발의 했다. 난임을 호소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유의미한 대책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반영이 돼 통과됐다. '임산부 정기검진보호자 동행 지원법'도 대표 발의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검진을 하러 갈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제안과 입법발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지만 은퇴하고 일이 없는 '신중년 일자리문제'에 대해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이 퇴직 후에도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부딪힌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신중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겹친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신중년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우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중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신중년 일자리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문가들은 만성적 고용쇼크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전면적 수정이 절실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신중년과 청년의 일자리를 함께 창출해야 할 것이다. 📌



국회포럼1.4 창립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이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안을 설계

김해영
국회의원

- 20대 국회의원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지난 해 12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산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경과를 알고 싶다.**

출산(出産)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만들어 내거나 생산하다'라는 의미다. 이는 자칫 여성은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로, 아이는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아이는 태어나는 존재이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출산(出産)이라는 단어를 출생(出生)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아이를 주체로 하여 세상에 나온다는 의미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보고 대안을 설계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과 관점이 공식사회에서부터 변화하기를 바라며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법안 발의 이후 올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다. 하루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 법 개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지난 해 딸을 출산, 다둥이 아빠가 되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분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부끄럽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많은 현안들이 발생했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빠의 입장에서는 잘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웃음)

📌 **지역구인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와 가사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 계획은?**

주중에는 서울, 금요일에 부산으로 가서 주말을 지역활동을 하며 가족과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지역 행사 등의 참석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분담에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평소 떨어져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부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가끔적이면 육아와

가사활동 등을 책임지고 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육아에 빨래,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등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림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감하고 또 깨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어도 현재까지는 넷째계획은 없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는가?**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노인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청년이 불행하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73.4%, '노인이 불행하다'고 하는 답변이 59.2%로 전체적으로 '불행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 결혼하고 출산할 20~30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65.9%가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답변했다.

저출산·고령화를 놓고 단순히 인구의 문제, 숫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 문제에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삶이 불행하고,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면 어떠한 지원책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이 수당 등 복지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흐름을 전환해 부모가 되는 청년과 노인들에게 주거·고용 등 전반적으로 삶의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사진

📌 **고령화 사회의 우리나라 중년, 노년 인구의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7%로 세계 1위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상태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공익봉사, 공공형 근로 등의 사업에 집중되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은퇴한 노인과 중년의 일자리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단기적 해법이 아닌 임시·일용직의 감소,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같은 경제 전반적 구조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3명의 여성구청장을 탄생시켰다. 부산광역의회 의장도 여성위원이 선출되는 등 여성들이 약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동수 50%에는 못 미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고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완벽한 실현까지 아직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에 대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50% 할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여성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를 통해 당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광역비례대표 당선인 87명 중 6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385명 중 374명이 여성이다. 여성 정치인 상당수가 비례대표 할당제를 통해 정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해 지역구에 대한 여성 공천 확대는 물론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평화교류의 통로로 부상하는 강원도 성주류화 도정으로 여성대표성 강화

최문순
강원도지사
3선

연초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강원도가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의 물결 속에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강원도의 최문순지사는 엄마같은 도지사, 평화도지사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문순 지사를 만났다.

❖ 카리스마가 있는 행정가보다는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엄마 같은 도지사를 성공적인 도지사로 강조했다. '엄마 같은 도지사'란?

가부장제의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는 아빠(아버지) 이미지와 대별되는 의미다. 최근에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많이 근접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 시대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 한 가정의 리더이자 구성원이다. 도지사는 늘 도민을 자녀처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직분을 다해야 하는 자리다. 강원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엄마 같은 도지사', '평화도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의 물결 속에 강원도가 부상하고 있다. 3번째 임기 목표를 남북협력 사업 확대에 정했는데, 강원도 특징을 살리는 남북협력 계획은?

강원도가 냉전, 분단의 최전선에서 평화 교류의 최전선으로 바뀌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전력투구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물적 교류 토대를 바탕으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크루즈, 철원공단(개성공단의 반대개념) 등을 모색해 인적교류도 공고히 해나가려고 한다. 6·13 선거에서 평화 8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새로운 분권모델을 만들고 동해 남북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해 저도 어장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일 등은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정선 알파인경기장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 사후대처와 올림픽시설 활용 방안 등 '포스트 동계올림픽'대책은 무엇인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7월 예방시설을 완료해 산사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과 산사태 예측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정선군과 협업하여 사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 경기장 사후활용은 14개 대회시설 중 11개소는 관리주체와 활용용도가 이미 정해졌다.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처럼 운영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전문체육시설의 국가훈련시설 지정(4개소)과 연간 운영적자분 국비 지원 비율이(75%, 34억원)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2025년 동계 세계군인체육대회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남북 간의 교류·화합을 위한 경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한국의 다보스포럼을 표방한 '평창포럼'이 지난 3월 출발했다. 포럼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2018 평창포럼에 참여한 여성 비율은 40% 정도다. 결코 낮지 않다. 평창포럼의 주제는 다양하며 그 중 '여성'도 하나다. 3월에 진행된 '평창포럼 for 여성'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포럼에도 여성이라는 세션을 별도 진행해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주제를 지속가능성, 평화, 인권 등과 포괄해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창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여성부지사를 임명하는 등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강원도는 지역성평등지수가 5년 연속으로 전국평가에서 상위수준이며 2014년 7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2017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



평창포럼2018 For 여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1월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지난 8월에는 속초에서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참여율을 40%로 높이려고 한다. 여성인재 발굴 시스템인 강원여성 인재 DB도 구축해 2000여 여성인재풀을 마련했다.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젠더파트너십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전문 여성인력도 육성하고 있다.

❖ 지방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와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2017년 기준 강원도 인구는 2035명이 증가했다. 아쉽게도 청년층(만15세~34세)인구는 4405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일자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장기채직) 기반강화 및 근로여건개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전액지원해주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추진해 2,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600여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으며 정규직 채용기업에는 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로 제주가 커지는 꿈 실현 더(more) 제주처럼 더 진화된 여성친화도시 완성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선

제주해녀들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거울 같은 리더십을 보여준다.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로 바빴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속가능한 행복 공동체로 제주가 커지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젠더 거버넌스의 비전이기도 한 상생을 기대하게 하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를 인터뷰했다.



❶ '제주가 커지는 꿈'을 기치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원희룡을 선택한 제주도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주가 커지는 꿈은 지속가능한 행복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도민 주도로 청정과 공존, 일자리, 미래가치를 더 키워냄으로써 제주자본이 커지고 도민행복이 커지는 것이다. 제주도부터 화합하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겠다. 정당과 진영,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 통합하는 제주를 만들겠다. 엄마들의 '육아 독박'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여성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회참여의 벽이 없도록 하겠다.

❷ 선거 유세 당시, "제주도민을 위한 '맛있는 밥상'을 차려 제주를 키우겠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주도지사로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동안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했다. 부동산 개발위주의 중국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성장위주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교통정리를 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 쓰레기, 주거 문제도 상당 수준 해소하는 단계다. 4,000억 원이 넘는 외부차입 채무도 다 갚았다. 이제 제주의 가치를 더 키우고, 성장의 열매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제주의 새로운 기회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백두산 공동 생태연구, 남북 크루즈라인 개설 등 교차관광,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를 활용한 북측 에너지단지 개발 등을 이미 제안했다. 제주 삼다수처럼 먹는 샘물 공동개발도 가능한 영역이다. 앞으로 제주형 남북교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❸ 제주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해녀들로 유명하다. 특히 해녀문화는 인류문화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제주도가 해녀와 그 정신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살려낼지 기대된다.

제주해녀는 상군·중군·하군이던 그룹을 형성해 대상군의 리더십을 따라 안전한 작업과 공동체 화합, 마을의 공익에 기여해왔다. 노약자에게 얇은 바다(할망바당)를 양보하고, 작업량 등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바다와의 공존을 위한 공동어장관리, 가족에 대한 헌신 등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거울이 되고 있다.

제주해녀가 지닌 상징성과 자연친화적 작업방식,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동체 문화 등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해녀문화의 세계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해녀 명맥을 잇기 위한 복지와 소득 지원, 해녀학교 활성화 등 해녀문화전승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❹ 제2공항건설, 중국자본문제 등 현안이 많다. 개발과 보호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도 제주의 현주소다. 재선 제주지사로서 당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가?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 자연이다. 난개발에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 취임한 이후 대규모 부동산 신규 개발 사업은 모두 막았다. 투기형 개발 자본을 걸러내고, 외국인 부동산 영주권 대상지역 제한, 가짜 농사꾼을 막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토지 쪼개기 매매 차단, 도시계획과 관련제도 강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기준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가치와 부합한 투자는 환영이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관광객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토부도 경제, 안전, 환경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제2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❺ 2016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면서 '2016년 여성정책 제주선언'을 발표하고 제주도를 양성평등 모범도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 성과가 궁금하다.

그때 약속이 상생과 돌봄의 가치 회복,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모범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가 뿌리내리고 있다.

2017년에는 '제주처럼' 양성평등정책이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성평등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앞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

더 업그레이드 된 '더(More) 제주처럼', 조직개편을 통한 '성평등 정책관' 신설 준비 등 더욱 진화된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완성시켜 나가겠다.

❻ 여성과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대기업이 없는 제주는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를 4년간 창출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도 함께 키워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 경제참가율과 고용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육아문제, 경력단절, 연령과 계층별, 사회참여와 연결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국이 부러워하는 제주의 육아공동체인 수놓음 육아나눔터와 모다들엉 돌봄공동체 지원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기업도 대폭 늘려나가고 있다.

❼ '제주 한 달 살아가기'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를 살고 싶지만 살기 힘든 곳이라는 말도 나온다. 살고 싶은 제주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제주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한다면 살기 힘든 곳은 아니다. 제주에서 제2의 삶을 사는 이주민이나, 제주 살이 하는 분들도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



2016년 11월 30일(현지시간) 제주특별자치도는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소신대로 해! 내가 지지해 줄게.”



최원재
• 경희대학교 교수
• 이연주 국회의원 남편

이연주 의원의 가족

“여성의정에서 남편의 역할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써줄 수 있어요?” 갑자기 아내가 부탁을 해왔다. “글쎄...”한 참을 망설였다.

나는 아내가 정치인이라 언론노출에 조심하고 있고, 주변에는 아직도 내 아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아내가 자랑스럽지 않거나 해서는 절대 아니다. 아내의 정치적 소신을 언제나 지지한다. 겉으로 연약한 듯 보이나 엄청난 열정과 사명감, 강인한 정신력을 지켜보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곤 결혼했을 때 깨닫는다. 요즘은 정치인이 지나치게 우상화되거나 희화화돼 그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웬만하면 잘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민 끝에 이 글이 여성정치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어렵게 펜을 들었다.

우리 내외는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아내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국회의원 당선이나 사법고시 합격보다도 아들을 출산했을 때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한다. 나는 서울소재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기초의학교수다. 아내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연구실에서 질병 메커니즘과 예방법을 찾아내고 신약을 개발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3시간표와 같은 의대생들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다보면 정치인 남편이라는 것도 잊어버린다. 하지만 지역구에 오면 어김없이 정치인 가족이라는 부담이 밀려오고 시장에서 물건 값 하나도 흥정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 아내의 정책이 지지를 받고 인기가 좋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반대가 되면 같이 힘들거나 우울해 질 수밖에 없다. 옆에서 지켜보면 인기에 연연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 미국 NASA 연구원에게 들었는데 아직도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불게 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바람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이 보는 이연주 의원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연주 의원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정 일보다는 국회나 지역구 일에 더 몰두하는 경향은 있지만 자투리 시간을 내어 못다 한 책임을 다하려는 성실한 사람이다. “양보다 질로 사랑을 보여줄게, 우리 귀염둥이!” “엄마 일이 바빠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단다.”라며 큰소리치는 아내를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나한테도 아들한테도 항상 애정표현도 직설적이고 재밌다. 나는 그런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는 장인어른 사업의 도산으로 장녀로서 가장의 역할을 해와서인지 웬만한 일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가끔 생각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나한테 털어놓곤 한다. 그럴 때면 뽀족한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꽤 의지가 되는 듯해서 뿌듯하다. 아내는 법률가지만 경제학을 전공하고 실물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서인지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고,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고 국제거래분야 변호사로, 다국적기업의 임원으로 많은 나라를 오가면서 살아와서인지 다양한 경험과 상식을 갖고 있다. 역사, 문화예술, 경제, 법, 국제관계 등등 연애할 때부터 함께 있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어떤 사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대안이나 묘안을 생각해 내는 능력도 대단하다.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이런 여성정치인이 나라를 위해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세포에는 functional compensation이라는 기능이 있다.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 원래 담당하는 단백질A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단백질과 가장 연관이 있는 단백질B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단백질 A처럼 100%역할은 못하지만 70~80%역할을 해서 세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정치인이다 보니 초등학생인 아들 교육과 관련된 일은 내가 도맡아 할 수 밖에 없다. 아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수라며 아내는 주말이면 최소한 반나절은 아들이랑 꼭 붙어 지내며 최선을 다하지만 매일 매일의 과제 검사나 준비물 준비, 공부 감독 등은 주로 내가 챙길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아내 분들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남편 분들이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는 자연계 교수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있다. 선거 때는 그나마 열심히지만 보통 때는 내 일을 하느라 아내 일을 돕는 건 한계가 있다. 아내도 나한테 그 이상을 부탁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는 이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정치적 견해를 대신 말하거나 내 역할을 대신 하는 건 바라지 않아. 난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언제나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똑부러진다.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이연주

아내덕분에 여성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최근 외국잡지에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컬럼을 읽었는데 여성정치인은 남성정치인에 비해 쉽게 프레임과 별명(딱지)이 붙어지고 헤어스타일, 구두, 가방까지 분석을 당한다고 한다.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모식에서 바로 옆에 흰 저고리 입은 단체가 있는데도 흰 재킷을 입었는지, 앞코가 뚫린 여름구두를 두고 샌들을 신은 게 아니냐 하며 도마에 올랐던 일도 있다. 아내가 정치인이어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남성정치인들은 인터뷰에서 남성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언론의 경우 남성정치인은 정책 이슈 관련 보도가 많은 반면, 여성 정치인들은 외모나 가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많고 주부나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다. 남성적인 영역인 정치에서 여성정치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나아가서는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호주총리를 지낸 줄리아 길러드는 호주정치계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적 연설을 했다가 반대자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길러드는 이 연설로 세계정치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아내를 비롯한 여성정치인들이 성공하려면 어렵겠지만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성차별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올바른 여성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의 도움이 강력히 요구된다. 여성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가족만큼 중요하고 강력한 지지자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신대로 해! 내가 지지해 줄게.”



2017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가족과...

이연주 의원

- 19, 20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대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참여



신낙균
 • 15대, 18대 국회의원
 • 전 문화관광부장관
 • 한국여성의정 이사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수난의 역사 속에서 평화는 한반도 최고의 숙원과제였다.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여성들에게 평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다. 전쟁과 같이 참혹한 사건은 큰 희생을 동반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급기야 한국전쟁을 야기시켰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동족상잔의 상실과 희생을 낳은 참혹한 비극이었다. 지난 65년 동안 잠재된 전쟁의 위협과 공포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에까지 위협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는 5차례 걸친 남북공동성명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13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이 그것이다. 이렇게 5차례에 걸친 남북공동성명은 모두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추구한다는 '자주,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모든 선언은 그러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명목상의 선언으로 끝나버렸다. 다행히 이번 5차 남북공동성명(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 모두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된 의지를 담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소외 없는 평화실현의 장이 되어야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도론에 이의를 더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평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보수와 진보, 남녀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평화실현의 주체로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유엔도 2000년에 결의안 1325호를 통해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등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를 촉구하였고, 유엔 회원국에게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에서 통일·외교·국방부의 주요 정책분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실행 목표를 세웠다.

여성참여 고려되지 않은 4·27 평화 프로세스 아쉬워

세계 모든 전쟁과 분쟁지역에서 여성이 더 큰 피해 집단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은 대략 2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80%가 조선여성이었다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인 학살 인원도 수십만 명에 달했다.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의 숫자는 약 33만 명, 이 중 80%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우익단체 등이 집단학살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208구가 수습되었다. 유해 중 여성이 85%, 남성은 15%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4.27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참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여성위원은 외교부 장관 단 한사람뿐이었다. 이 또한 외교부 장관이라는 직위가 부여한 참여였을 뿐, 여성에 대한 안배라고 보기 어렵다.

전쟁과 분쟁은 힘의 논리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평화는 대화와 협상, 중재와 상생의 원리를 수용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전쟁의 큰 희생자인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온전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평화는 인류보편의 최우선의 가치로 승화될 수 있다.

분단 65년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참여가 더해질 때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성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를 읽고

제헌이후 70년간 여성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하종범
•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영화 「쿵푸팬더」에서 사부 시푸는 주인공 포에게 “어제는 역사(history)이고, 내일은 신비(mystery)이며, 오늘은 선물(gift)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거의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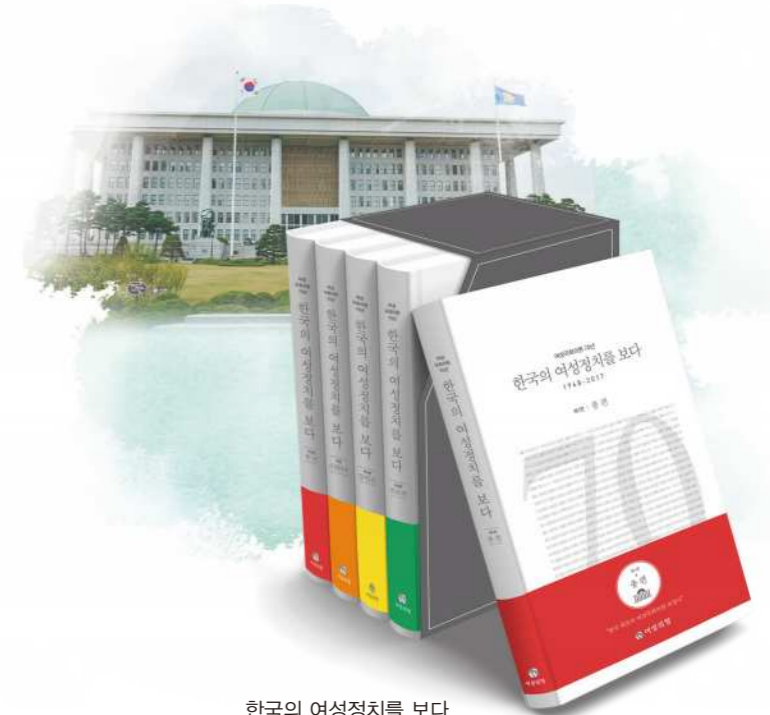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역사의 편린들이 오늘 이 순간(present), 선물(gift)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을 본다.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여성 국회의원70년!」 긴 세월 동안 가려져 있었던,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외롭고, 힘들었던 그러나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간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이야기다.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이 땅의 여성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찌든 가난과 고된 노동, 교육을 받을 기회 박탈,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별, 결혼의 부자유 등.....사회문화적 환경, 법적·제도적 여건, 삶의 모든 관계와 역할 등 존재양식은 너무나 비참했고 척박했다. 이러한 3중고의 악조건 속에서 제1기 여성의원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듯이 각기 다른 삶의 자리지만 열정과 꿈은 하나같았다. 일제 탄압으로 배울 수 없게 되자 타는 목마름에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치르고, 아들에 대한 차별로 대화에 끼어 들 수 없게 되자 문지방에 서서 듣다가 들켜 혼나기도 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자의식으로 뚝뚝 뭉쳐 당차게 행동했다. ‘자네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저는 한국을 구제하렵니다.’라며 가슴 뛰는 애국으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나누어 주었던 여성들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넘어 늘 사회, 민족과 국가의 독립과 평화와 안녕을 위해 달려갔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멸시당하며, 가난하고, 무지하였던 여성들로 하여금 자의식을 갖게 하고 배움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뭉쳐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성교육을 실천하고 여성운동을 펼쳐 나갔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학생조직을 만들고, 여성단체를 조직했다. 여성정당을 창당하기도 했고 과도입법의원으로 정부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UN에서 한국전 파병지지를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정치역정을 개척해 나간 선구자적인 정치인생을 살았다.

이어진 제2기 여성의원들은 정당출신과 다수의 전문직 비례대표 출신들이다. 한국전쟁과 5.16군사정변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당의 공천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였다. 당내 지지기반은 약했고 정당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는 등 여전히 남성중심사회에서 변방에 위치했다. 여성의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원들에 의한 대표적인 여성 관련 법률이다.

제3기 여성의원들은 1987년 민주화이후 정계에 진출한 여성들로 시민사회 및 여성계 대표출신, 전문직 출신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성차별,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일 가정 양립, 젠더폭력방지, 호주제 폐지, 성 주류, 공직선거참여 등 여성권익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정감사와 예·결산심사 등에서 여성의 사회문화적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여성의원 비율이 제20대국회에서 17%. 여전히 힘든 정치 환경 속에서도 여성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남성의원보다 더 두드러질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힘을 합해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는 신비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신뢰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기에 기쁨의 열정으로 가득하며, 서로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넉넉한 가슴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기에 안전하고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여성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의의와 가치를 갖고 자아실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곳이다. 아름다운 존재양식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을 볼 때마다 ‘조국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김구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마음으로 먹다. 어우름의 음식, 잡채 이야기

김유신

- 현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총괄부장
- 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봄나물잡채



여름채소잡채



잡채(雜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잔치음식이다. 생일상은 물론 결혼식 축하연, 집안 경사를 축하하는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이는 잡채가 각종 채소와 육류, 그리고 당면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들어져서 남녀노소 모두 재료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거니와, 예로부터 축하 음식으로 여겨 온 국수와 형태상 비슷한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민족의 선호음식인 잡채는 오늘날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잡채이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식당들의 고정 메뉴 중에도 어김없이 잡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도 잡채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다. 이렇듯 안으로는 민족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밖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잡채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잡채를 먹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고 조리서 ‘음식디미방’에 보면 모두 146가지의 음식 조리법이 나온다. 이 중 잡채는 연근채, 동아둔채, 대구깍질채, 외화채와 더불어 조리법이 적혀 있어 음식디미방이 쓰여진 17세기는 물론, 그 훨씬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음식디미방에 적혀진 잡채의 조리법을 보면,

“오이채, 무, 땃무, 참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녹두나물은 생것으로, 도라지, 거여목, 마른 박고지, 냉이, 미나리, 파, 두릅, 고사리, 시금치, 동아, 가지와 꿩고기는 삶아가늘게 찢어 놓아라. (중략) 각각 기름 간장으로 볶아, 혹은 교합하고 혹은 따로 담기를 임의로 하여 큰 대접에 놓아라. 즈음 뿌리되 적당히 하고, 위에 천초, 후추, 생강을 뿌려라.(후략)”

라고 쓰여 있어 오늘날 잡채의 주 재료가 된 당면을 제외하면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잡채는 어떤 것이었을까? 잡채라는 이름에 해답이 있다. ‘잡채(雜菜)’란 말을 풀어

보면 ‘여러 가지(雜) 야채(菜)’를 섞어 놓은 음식을 의미한다. 그 이름처럼 잡채는 본디 여러 야채들을 잘게 채를 쳐서 기름에 볶은 후 간장, 혹은 된장과 생강이나 겨자 등과 버무려서 먹던 음식이었다. 주재료에 따라 부추잡채, 두부잡채, 김치잡채, 고추잡채, 떡잡채 등이 있다.

조선 전기의 학자 서거정은 청빈한 선비의 삶을 노래한 자신의 시에서 “남에게 빌리는 건 오직 말뿐이요(借人唯有馬) 손은 만류하재도 규채가 없어라(留客本無鮭)”라고 하며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남제(南齊) 때의 청백리인 유고지(庾杲之)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이 중 ‘무구(無鮭)’란 말은 해산물과 각종 채소가 없다는 것으로 청렴결백을 상징하는 데 유고지는 청렴하고 고고한 삶을 추구하여 평생 동안 오직 부추로 만든 잡채만 먹었다고 하니 유고지의 잡채는 곧 청빈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임금님인 세종은 성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위기간 내내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제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구황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총정리한 것이 ‘경험진제방(經驗賑濟方)’이다. 이 중에 “도라지가루 한 숟갈, 잡채(雜菜) 한 줌, 장과 소금 각각 한 숟갈을 타서 이를 달여 먹으면 한 사람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 있으니, 실농(失農)한 각도에 공포하여 시골 백성에게 두루 알리게 하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서 먹는 잡채가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한 구황식품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의 잡채는 위민(爲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잡채란 본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음식이니 조화와 화평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이 음식이 쓰임에 따라 간신을 경계하기도 하고 백성을 살리거나 청백리를 높이는 상징이 되기도 하니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 자못 깊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정치도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만나 타협과 조화를 통해 국민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잡채와 같이 조화로운 맛을 지닌 정치가 이루어질 길 기대해본다. 🍲

저출산 시대의 세계 여성 정치인



김균미
 • 서울신문 대기자
 • 서울신문 편집국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6월 말 37살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첫 딸을 낳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1990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총리 이후 현직 여성 총리가 엄마가 된 건 28년 만인데다 여성 총리의 출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당당하게 출산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될 것"이며 "선택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공하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여성 총리의 출산, 그 자체가 저출산대책

아던 총리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18주의 유급 출산휴가 중 6주 만 쓰고 8월 초 총리직에 복귀한다. 나머지는 배우자가 활용하면서 갓 난 딸을 전적으로 돌본다고 한

다. 아던 총리가 더 오래 출산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복귀하고 나서도 총리 집무실이나 의회에서 딸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뉴질랜드 언론들은 전한다. 그만큼 정부와 의회, 사회 전체가 친가정적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1.81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북유럽 국가들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아던 총리의 출산과 육아는 저출산 대책의 수준과 사회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뉴질랜드에는 아던 총리 말고도 녹색당 출신의 여성 부 장관인 줄리 앤 젠터(39)도 8월 초 출산 예정이다. 젠터 장관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올 계획이고, 부재 기간 동료 장관들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아던 총리가 속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부모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갓난아기를 둔 여성의원 2명이 선출되고 나서 의사당 안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 허용됐다. 트레버 말라드 국회의장이 동료의원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 말라드 의장은 의회를 육아와 일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의회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에서는 언제쯤이나 가능한 얘기일까.

각국 의회는 친가정적으로 변화중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서 각국 의회도 변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외에 호주와 캐나다, 유럽의회 등에서는 의원들이 갓난아기를 포함해 어린 자녀와 함께 출석해 표결 등 의정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 진행 발언이나 표결 중 수유도 가능하다. '유럽의회의 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6월 24일 배우자 클라크 게이포드와 함께 첫 딸을 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오크랜드 AFP 연합뉴스



▲라리사 워터스 호주 상원의원이 지난 해 6월 캔버라 의회 의사당에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학교기금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료의원들이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캔버라 로이터 연합뉴스

마'로 불리는 포르차 이탈리아 정당 소속 리치아 룬줄리는 2010년 9월 유럽의회 개원 첫날 의사당에 생후 6주 된 딸을 안고 표결에 참여한 뒤 3년 동안 딸과 동반 출석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밝힌 것처럼 여성의원들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서구 의회라고 모두 여성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 하원은 아기들의 의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성의원들이 임신하면 '직무유기'라며 '사퇴하라'고 비난하는 일부 여론까지 있어 급기야 한 여성의원





▲ 지난해 3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 스웨덴의 구트란트 의원이 아이를 안고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로이터 연합뉴스

이 '선출직의 출산휴가법'을 추진하고 있다. 남 얘기 같지 않아 답답하다.

신보라 의원, 현역 의원 중 두 번째 출산 예정

한국은 어떤가. 자유한국당 신보라(35) 의원이 오는 9월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임마가 되는 것은 2015년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장 전 의원은 출산 직전까지 가능한 한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 받아 국회에 입성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구실 삼아 나중에 청년, 여성은 뽑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리고 많이 후회했다고 한다. 출산하고 10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산모에게 법으로 보장된 석 달간의 출산휴가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 규정이 따로 없어, 이 기간 중 상임위와 본회의는 결석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앞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전 둘째를 출산했으나 따로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 국회의원들도 출산휴가 한번 제대로 못쓰는데 민간 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은 오죽하겠

느냐는 말이 나올 만 하다. 이런 마당에 아기와 의사당 동반출석이나 모유 수유 허용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신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는 평균 연령이 55.5세, 남성 의원이 83%나 된다. 출산·육아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말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입법이나 예산으로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가 변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 30~40대 의원들이 늘어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야, 출산을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입법화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뉴질랜드처럼 엄마 총리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엄마 장관', '엄마 국회의원', '엄마 CEO'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희생하지 않고도 원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눈앞에 닥친 출산율 1.0명 붕괴라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꿈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
방송, 통신, 광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 큰 내일을 이끌어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오늘의 한국여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중요 척도 중 교육, 노동, 정치참여 세 가지만 살펴보자.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남학생 대학진학률을 0.4%p 추월한 이래 여대생들 약진은 놀랍다. 2017년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다.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고등교육을 더 받았다. 그러나 직업전선에선 다르다.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나,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차이는 20.4%p다. 여성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2% 수준으로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 통계가 말해주듯 사회는 여성에게 철저히 냉담하다.

한편,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55.7%)>여(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60.2%이나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의 변화를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현상이 보인다. 미래예측도 가능하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물론이고 선거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약간씩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30%도 크게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은 역시 멀다. 2017년 드디어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 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아직 멀었지만 여성이 약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여성권리 획득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많은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의 토대가 있다.

120년 전,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 설치 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여성들이 300여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¹⁾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 날의 감동은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다. 그 이래 훌륭한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고 여성사에 대한 깊어지는 관심을 갖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개국에 이미 있는 여성 박물관들에 대한 부러움과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아직도 없음에 부끄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 발전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가도 하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1) 박용옥, 1896-1910 婦女團體의 研究, 한국사연구 6권; 103-135, 1971



안명옥

- 17대 국회의원
-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다시 자랑스러운 '여권통문(女權通文)' 이야기.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평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다른 직업권, 정치권도 교육으로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²⁾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부인들에서 시작하였으나, 일반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하였고, 남성들도 가담하였다. 그 결실이 1899년 한국인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이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말부터의 여권운동 결과다. 2005년 이래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질렀지만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형제의 대학진학을 위해 자신의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하여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민간에서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통문이 발표된 날을 여성계를 넘어 국가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지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선언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랄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여류작가 120인전 시회도 10월내내 국회에서 열린다. 우리모두 축하하며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

2) 박용옥, 구한말의 여성교육, 사학연구 (21); 361-378, 1969



▲1898년 황성신문에 실린 '여권통문' 원본



“여성기업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효림그룹 회장
-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2019년 법정단체 2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체인 효림그룹의 CEO. 중소기업부와 여성기업인, 남성기업인이 균형점을 찾아 세발자전거가 되어야 경제성장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019년이면 법정단체로 탄생한 지 20년이 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1971년에 창립한 '대한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협회의 모태다. 1999년 여성경제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의 강력한 의지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법정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돼 16개 지회에 2,500여개의 회원사가 있다. 협회에서 설립한 재단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앙센터와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서 225개의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이면 법정단체로서 20주년을 맞이한다.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회원수를 확충하고, 젊은 여성기업인을 참여시켜 여성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한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OECD 35개국 중 31위다. 협회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2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회원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품질은 우수하나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이 많다. 좋은 방안을 고민하던 중 '여움'이란 공동 인증브랜드를 개발했다. 여움은 '여성의 꿈이 움트다, 여성기업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의미다. 2017년 1기에는 73개, 2기에는 28개 업체를 선정했다. 여움몰, 여움홍보관을 운영하며, 대형 유통망과의 교류를 통해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여움시식회와 MD품평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서로사랑 네트워크'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에 판촉전을 실시해 거래금액 10억 원을 달성했다.

3 여성들의 창업이 활발해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의 질도 좋아진다. 창업을 꿈꾸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협회의 지원정책은 있는지.

대표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여성가장창업자금'이 있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신청건수는 400건으로 타 기관 경진대회에 비해 많이 접수된 편이다. 올해는 2배 이상인 933건이 접수돼 창업에 대한 열의가 갈수록 대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상팀의 아이템은 '시 기반 신발 핏 추천 솔루션'으로 기술력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결합한 제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기업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은 상금뿐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 4억원 투·융자 연계와 같은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창업보육실 무상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장창업자금'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이내 점포 임대 보증금을 연 2% 금리로 지원해준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 올해는 지난 6월 마감됐을 정도다. 현재 24억원대의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2%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협회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특징은 출산양육기에 경력단절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기업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지난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의 프로젝트성 업무와 여성인력을 온라인상에서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만들었다. 이 플랫폼은 일자리 매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등 경력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는 따뜻한 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5 여성기업인들의 역량강화 등 성장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과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은 연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연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여성CEO 경영연수는 여성기업인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초청강연과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여성기업인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6 여성기업인들의 큰 고민이 판로개척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도 판로개척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TV홈쇼핑의 입점 지원 교육부터 업체의 특성에 맞는 전문 컨설팅, 상품품평회, 영상제작,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2017년 16개 여성기업이 총 매출 18억 4천만 원이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5개 업체를 방영했는데, 목표대비 평균 135% 수익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중소기업부에서 올해부터 '여성기업 제품 홈쇼핑 특별방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초기 여성기업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세계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첫 수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지난해 15개 업체를 설정해 6개 업체가 수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20개 업체로 확대했다.

7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기업 환경에 변화가 많다. 협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여성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기업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가 37.6%, '고용인원 감축'이 16.9%로 나타나 고용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시행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8 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여성정치인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지난 7월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형태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일반법으로는 남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성기업을 남성기업 수준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경쟁경제체제로 나가야 한다. '세발자전거' 비유를 들곤 하는데 앞바퀴가 중소기업부라면 뒷바퀴 2개는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이다. 제대로 속도를 내려면 뒷바퀴 2개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여성정치인들이 여성기업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2017 한미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발언중인 한무경회장



최초 국회 여성상임위원장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유립을 감동시킨 리더십으로 큰 호응



김철안
• 제 3,4대 국회의원(1954-1960)

실천하는 여성계몽주의자

김철안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단연코 튀는 신여성이었다. 부모와 남편의 그늘에서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여성계몽주의자였다.

1933년 경북 김천의 만석꾼 집안으로 시집을 간 김철안은 농사일도 거뜬히 해내고 밤에는 바느질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집안 살림과 내조에 국한된 역할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4세에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기와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재건사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다. 1945년 9월 18일 임영신, 김선과 함께 각 지역 대표들을 독려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을 창당,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1946년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경상북도 지부장을 맡아 우익세력의 집결을 추진하는 정치력도 발휘했다.

1949년 5월 대한부인회를 설립, 박순천 대표와 함께 여성운동에 매진했다. 박순천 대표가 여성계몽의 하나로 일간지 발간을 추진하며 동참을 당부하자 서슴없이 논밭 30마지기를 내놓으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암탉이 울어야 하는 이유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철안은 선거패배의 원인으로 봉건인습에 매여 남자들의 그림자만을 쫓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여성유권자들의 낮은 정치의식을 지목했다. 이때부터 대한부인회 등을 통해 여성문맹퇴치운동에 집중하는 등 계몽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철안은 경북 김천군 금릉에서 자유당 공천을 받아 7명의 남성 후보들을 꺾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유립세력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전쟁 시기에 보여준 헌신적인 피난민 구호사업에서 유립의 마음을 얻은 덕분이었다.

선거운동동안 상대후보들은 김철안이 연단에 설 때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여성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이때마다 김철안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은 병아리들이 다시 미·소 양국(술개에 비유)에 의해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자신의 정치활동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암탉의 모성에 비유하여 유립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어냈다.

사회보건위원장으로 모성에 기반한 정치 실현

여성정치인 김철안은 가정을 도외시하면서 권력에 천착하는 남성들의 정치철학과는 결이 달랐다. 여성 고유의 정체성을 가정에서의 확고한 지위에서 찾았다. 가

정의 화목은 여성이 가진 천성인 인화에서 비롯되고 인화가 선정을 펴는 기본이며, 민주정치의 모체라고 생각했다.

모성에 기반한 김철안의 정치 신념은 의정활동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3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로 국회 사회보건 위원장에 피선된 후 전쟁 미망인과 전쟁 고아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열과 성을 다했다. 제일대한부인회 대표가 들어온 재봉틀 700여대 중 400여대를 군경 미망인들에게 불하하여 피복 제조공장을 가동시켰다. 폐쇄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여성들에게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가축 부업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4대 국회에서 김철안은 보건행정에 주력했다. 전쟁 후 재건사업이 한창이던 때라 위생시설과 사회적 기반시설이 취약해 전염병이라도 돌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품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구충 소독 작업 등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 전염병 예방교육 등 국민계몽도 강조했다.

김철안은 여권신장과 관련된 의정활동에도 목소리를 냈다. 상속 및 친족 편 등에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으나, 보수적인 남성의원들의 비협조로 부결됐다. 일부 여성단체 대표들은 유일한 여성대변인이었던 김철안 의원이 자유당 내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훗날 김철안은 정당조직 내에서 여성의원이 갖는 한계를 토로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엇갈리는 평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4.19 혁명이 촉발되었고 김철안을 포함한 4대 국회의원 전원은 사퇴했다.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철안은 3.15부정선거에 연루되어 14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김철안은 이후 제5,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국회의원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다. 김철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 우파 정권에 아부했던 인물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력만은 여성정치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



4대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김철안, 박순천, 박현숙 의원(왼쪽부터)
(한겨레신문 1996.3.17)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신앙생활에 주력

황산성 (제11대 국회의원)



제11대 국회의원 황산성 전 의원(당시 민주한국당)은 사법·입법·행정 3부를 모두 섭렵한 유일한 여성이다. 20대 판사 임용, 30대 국회의원 당선, 40대 장관 취임에 이르기까지 그가 밟아온 길을 돌아보면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국회의원 시절 그는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과 대변에 큰 비중을 두었다. 여성이 남녀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 이라고 판단했다. 여성의 자립과 독립을 신앙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과제였다. 환경처 장관으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폐기물 문제 등 환경문제의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에 동분서주했다.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국무회의에 상정된 위안부 관련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그 명칭에 역사성을 살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되기도 했다.

2013년 법률사무소를 정리하고 미국에서 큰 아들이 사무하는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성도들과 교류하며 지내고 있다.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TV로 한국 소식을 듣고, 손자·손녀들과 함께 지내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한다. 눈부시게 태우던 그 정열을 충전하고 남녀동수 정치를 걱정하며 뛰어오길 기대한다.

가족의 사랑 속에 행복한 할머니

김장숙 (제12대, 제13대 국회의원)



제12대와 제13대 국회 국회의원을 지낸 김장숙 전 의원(당시 민주정의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 약사 출신 국회의원' 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앞장섰고, 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제2)으로 임명되어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전 세계의 여성이슈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절호의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고향인 강원도 사랑이 남달라 사)강원도민회중앙회 고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섰다. 건강 때문에 성공리에 마친 올림픽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최근, 만손자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사는 막내 딸 내외가 방문해 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며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가족사진을 함께 찍지 못한 손자·손녀들도 있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손주들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소녀 같은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의 따사로움을 느끼게 하는 김장숙 전의원의 건강을 기원한다.

다시 기업인으로, 사회봉사자로

손인춘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손인춘 전 의원은(당시 새누리당) 군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위원회에서 군의 각종 부조리와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국방정책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성폭력 근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5년부터 3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처음 입학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손인춘법'이라 불리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케아법이라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유관순법이라고 불리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5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의정활동을 마치고 (주)인성바이오 대표이사로 돌아와 국민의 면역 건강, 예방,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사단법인인 여성행복시대 대표이사로 젊은 엄마들에게 필요한 육아교육, 일자리 창출, 결혼 및 출산장려운동, 가출청소년 및 10대 미혼모들 교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청소년상담지원연맹총장으로 취임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추어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지금 여성 국회의원은

권미혁(비례대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미투 응원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취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소위 '먹튀 방지법'이라 불리는 「감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5월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이 방탄 국회용으로 약용되고 있어 '불체포 특권'이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를 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김삼화(비례대표)

취약계층의 석면 피해를 줄이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석면 해체비용과 개량비용 모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질환이 의심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차 검진 후 발생하는 추가 확진검사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본회의 통과 후 금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재선)

어린이집, 학교, 병원의 출입구나 지하철 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옥시3법을 발의했다. 이 중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비자집단소송법」도 제정돼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선숙(비례대표, 재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6월 22일 발의하여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은행의 수익으로 했던 자기앞수표 미청구분을 서민금융 지원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민금융 지원의 재원이었던 휴면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휴면예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은행의 출연금이 대폭 줄어 새로운 재원 마련에 고민하던 때 여러 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고단한 삶 속에서 기댈 언덕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송희경(비례대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8.1.30)을 발의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2.9)을 발의,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기업에게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했다.



신보라(비례대표)

청소년수련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17.3.2. 원안가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18.5.21.대안반영폐기)

점차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18.5.28. 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해 학교 환경교육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센터들이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미(비례대표)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대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7년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 무효토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비례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여성의 국회의원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효과가 있다.

신용현(비례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그동안 일률적으로 받던 규제, 인력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 중심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정부의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 수립 시 1인가구를 포함시켜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정숙(비례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17.04.05 발의)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하기에 국공립대 교수들이 겸직 시 연은 수입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채용 성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열 건 중 한 건은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해자의 범위를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해 성희롱 인정 범위를 넓히는 동법 개정안을 지난 2017년 9월 발의하는 등 노동자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3선)

제20대 국회 상반기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어르신 일자리 보급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지자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자연생태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현희(서울 강남구을, 재선)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명절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에 대한 명절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재선)

개정 전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문화표현과 활동에 있어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국민의 문화권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정치적 견해차·입장차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거나 예술 활동의 검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곧 국민의 문화향유권의 증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동 법안의 통과로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재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에 있는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예산 관련 여야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은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 현행 본인일부부담금의 50% 감경을 본인부담금 60%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

여성국회의원 70년 활동기록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북콘서트



한국여성의정 창립5주년기념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북콘서트 개최(2018.5.25.)

한국여성의정은 5월 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정의 창립5주년과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으로 제헌이후 여성국회의원의 70년 활동을 기록한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 정치 발전에 공로가 큰 △여성신문(대표=김효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최금숙)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백미순, 김영순, 최은순)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양금희) △한국YWCA연합회(회장=한영수)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김방림) 등 6개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2부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북콘서트는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의 ‘여성의회정치 70년 활동’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유권자서울청년연맹 변재우 회장, 청소년참여권운동활동가 강민진 위원장,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대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 백혜련 의원의 남편인 경기시민연구소 ‘올림’ 박완기 대표,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부산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 등 8명이 패널로 나와 여성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담을 이어갔다.

2018년 제2차 이사회

6월 14일 오전 11시 한국여성정의 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의장 이연숙 상임대표, 이사 공동대표 등 29명)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사업 실적 등 5개 보고안과 직제규정 개정, 여성의정 제5호 발간 계획 등 3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2018 제2차 이사회(2018.6.14.)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한국여성의정은 6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각 정당 여성위원장 및 이번 지방선거를 몸소 체험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되짚

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의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후원했다.



6.1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2018.6.26.)

6·13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워크숍 및 축하모임

한국여성의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 지역 여성의정 아카데미 원장 주관으로 6·1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과 축하 모임을 개최했다. 당선자들에게는 지방정치인을 위해 제작한 여성정치인의 상징인 브로치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으로 당선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여성단체들과 여성정치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선자에 축하 브로치를 달아준다



6.13당선자워크숍(2018.7.25)

여성의정 아카데미 지역원장 회의

한국여성의정은 7월 30일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아카데미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을 논의하는 지역아카데미원장과 실무진회의를 가졌다. 2018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실시한 아카데미는 전문과정 217명의 수료생 중 60여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향후 예비정치인을 발굴하고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을 제외한 6개 지역에 제2기 아카데미 원장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여성의정 아카데미 원장 회의(2018.7.30.)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여성단체장 간담회



여성단체장 간담회(2018.7.24.)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남녀동수법 추진위원회(위원장=박영선 공동대표)를 구성했다. 동 위원회는 7월 24일 여성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남녀동수개헌에 힘을 모았던 여성단체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남녀동수법 제정의 필요성 등 법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금희 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남녀동수의 의의와 남녀동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가칭 남녀동수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모으는 한편 정책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 3명의 여성위원 선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국토교통위원장에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3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행정안전위원장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 도봉구갑) △여성가족위원장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 광진구갑)이 선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성상임위원장을 배출한 것은 국회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여성 상임위원장은 3대 국회에서 김철안 사회보장위원장을 시작으로 여성가족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 여성의원회장 포함) 정무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포함), 환경노동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 28명이다.

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여성 3인 진출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초선),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3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뽑혔다. 기초의회에서도 수원시의회 최초로 여성의장이 된 조명자 의장(더불어민주당, 3선)을 비롯해 곳곳에서 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탄생했다. 이들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중한 정치후원 금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POINT 카드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당선을 축하합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

(단위: 명)

회별 (연도)	합계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광역단체	기초단체	계	지역구	비례대표	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3,565	0	29	633	283	350	2,900	1,485	1,416	3
1회 (1995)	127	0	1	54	12	42	72	72	-	-
2회 (1998)	97	0	0	41	14	27	56	56	-	-
3회 (2002)	142	0	2	63	14	49	77	77	-	-
4회 (2006)	529	0	3	89	32	57	437	110	327	-
5회 (2010)	746	0	6	113	55	58	626	274	352	1
6회 (2014)	854	0	9	113	58	55	732	369	363	0
7회 (2018)	1,070	0	8	160	98	62	900	526	374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여성당선자 현황

(단위: 명)

지역	총계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광역단체	기초단체	계	지역구	비례	계	지역구	비례	
합계	1,070	0	8	160	98	62	900	526	374	2
서울	196	0	3	25	18	7	168	114	54	0
부산	78	0	3	10	7	3	65	40	25	0
대구	44	0	0	7	5	2	36	23	13	1
인천	50	0	0	3	0	3	47	31	16	0
광주	31	0	0	8	6	2	23	15	8	0
대전	33	0	1	5	3	2	27	18	9	0
울산	21	0	0	7	5	2	13	6	7	1
세종	4	0	0	4	2	2	-	-	-	-
경기	209	0	1	32	24	8	176	120	56	0
강원	46	0	0	9	4	5	37	14	23	0
충북	36	0	0	6	4	2	30	14	16	0
충남	54	0	0	8	5	3	46	20	26	0
전북	53	0	0	5	2	3	48	25	23	0
전남	60	0	0	8	3	5	52	24	28	0
경북	71	0	0	7	3	4	64	28	36	0
경남	76	0	0	8	4	4	68	34	34	0
제주	8	0	0	8	3	5	-	-	-	0

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



노옥희
울산광역시

기초 단체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



김수영
서울 양천구



조은희
서울 서초구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



정명희
부산 북구



정미영
부산 금정구



박정현
대전 대덕구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

광역의회의원



서울특별시



오현정
광진구



이영실
중랑구



김준례
성북구



이경선
성북구



최정순
성북구



최 선
강북구



봉양순
노원구



오한아
노원구



이은주
노원구



채유미
노원구



권순선
은평구



이승미
서대문구



김경우
동작구



유정희
관악구



김경영
서초구



김혜련
서초구



이정인
송파구



송명화
강동구



권수정
비례대표



권영희
비례대표



김 경
비례대표



김소양
비례대표



김소영
비례대표



김화숙
비례대표



여 명
비례대표



부산광역시



이 현
부산진구



이순영
북구



구경민
기장군



김민정
기장군



이성숙
사하구



박인영
금정구



이정화
수영구



김혜린
비례대표



윤지영
비례대표



최영아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배지숙 달서구	 윤영애 남구	 김혜정 북구	 이영애 달서구	 황순자 달서구	 이진련 비례대표	 이태손 비례대표		
 인천광역시	 박정숙 비례대표	 조선희 비례대표	 조성혜 비례대표						
 광주광역시	 박미정 동구	 정순애 서구	 임미란 남구	 김나윤 북구	 신수정 북구	 김광란 광산구	 나현 비례대표	 장연주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김소연 서구	 김인식 서구	 박혜련 서구	 우애자 비례대표	 채계순 비례대표				
 울산광역시	 이상옥 중구	 김선미 남구	 이미영 남구	 전영희 동구	 천기욱 동구	 김미형 비례대표	 김시현 비례대표		
 세종특별자치시	 손현옥 세종특별자치시	 이윤희 세종특별자치시	 박용희 비례대표	 이영세 비례대표					
 경기도	 박옥분 수원시강안구	 김직란 수원시권선구	 안혜영 수원시영통구	 이나영 성남시분당구	 최경자 의정부시	 심규순 안양시동안구	 권정신 부천시	 이진연 부천시	 황진희 부천시
 김영혜 평택시	 서현옥 평택시	 천영미 안산시상록구	 원미정 안산시단원구	 남운선 고양시덕양구	 김경희 고양시일산동구	 고은정 고양시일산서구	 김미리 남양주시	 문경희 남양주시	 김인순 화성시

 이은주 화성시	 김미숙 군포시	 정윤경 군포시	 손희정 파주시	 심민자 김포시	 김지나 비례대표	 김은주 비례대표	 오지혜 비례대표	 왕성옥 비례대표	 이에형 비례대표
 이해원 비례대표	 전승희 비례대표	 한미림 비례대표							
 강원도	 윤지영 춘천시	 허소영 춘천시	 박윤미 원주시	 신명순 영월군	 심영미 비례대표	 안미모 비례대표	 정수진 비례대표	 정유선 비례대표	 최종희 비례대표
 충청북도	 이숙애 청주시상당구	 옥미선 청주시서원구	 하유정 보은군	 윤남진 괴산군	 송미애 비례대표	 이옥규 비례대표			
 충청남도	 김연 천안시서북구	 김은나 천안시서북구	 한영신 천안시동남구	 양금봉 서천군	 김명숙 청양군	 김옥수 비례대표	 이선영 비례대표	 황영란 비례대표	
 전라북도	 김이재 전주시완산구	 국주영은 전주시덕진구	 박희자 비례대표	 최영심 비례대표	 홍성임 비례대표				
 전라남도	 강정희 여수시	 이보라미 영암군	 이해자 무안군	 김경자 비례대표	 김복실 비례대표	 윤명희 비례대표	 정옥임 비례대표	 최현주 비례대표	
 경상북도	 박차양 경주시	 남영숙 상주시	 임미애 의성군	 김영선 비례대표	 박미경 비례대표	 박채아 비례대표	 이선희 비례대표		

경상남도

김지수 창원시의장구	박옥순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옥선 창원시마산합포구	옥은숙 거제시	김경영 비례대표	윤성미 비례대표	이영실 비례대표	황재은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

강성의 제주시	고태순 제주시	이승아 제주시	강민숙 비례대표	고은실 비례대표	김경미 비례대표	오영희 비례대표	한영진 비례대표

기초회의의원 226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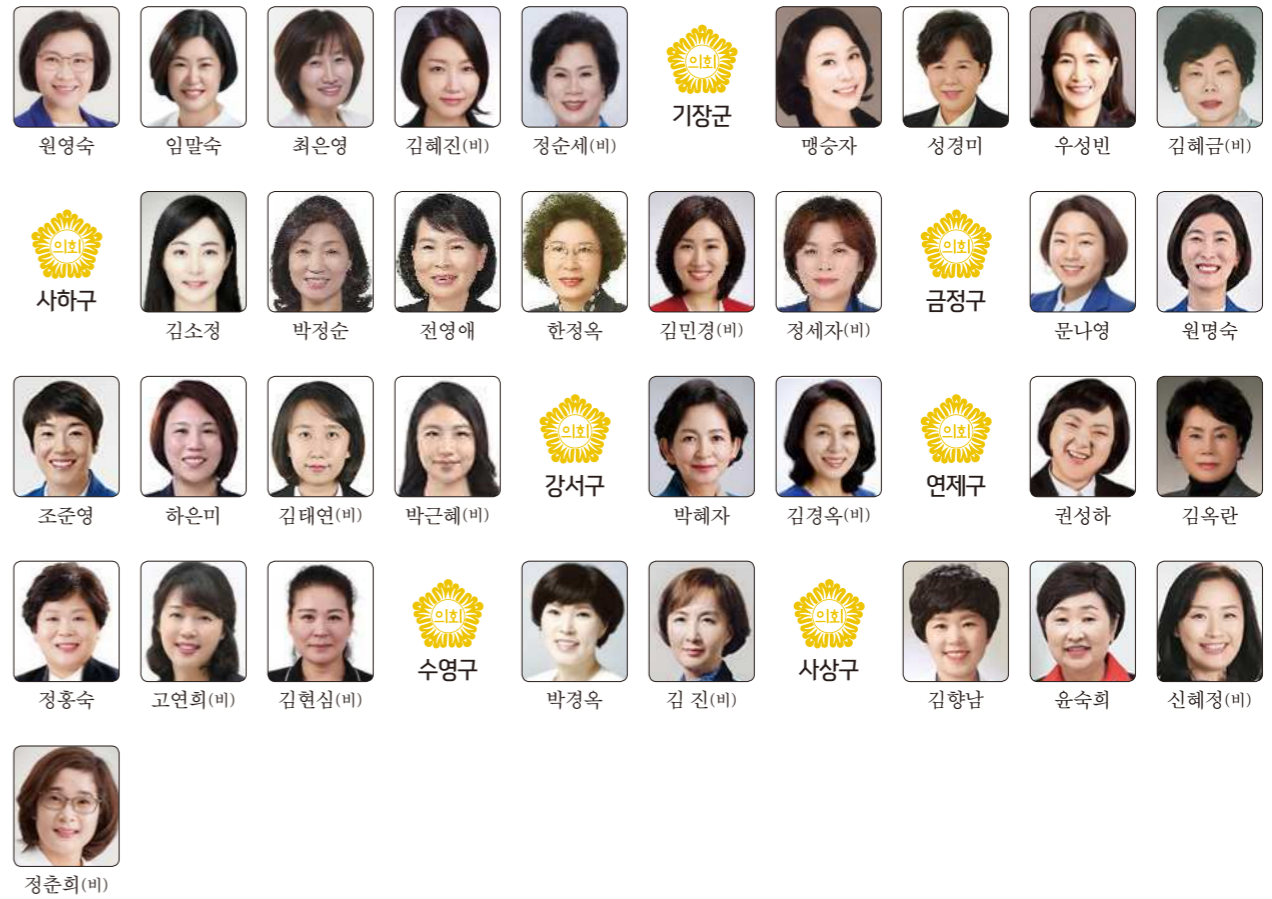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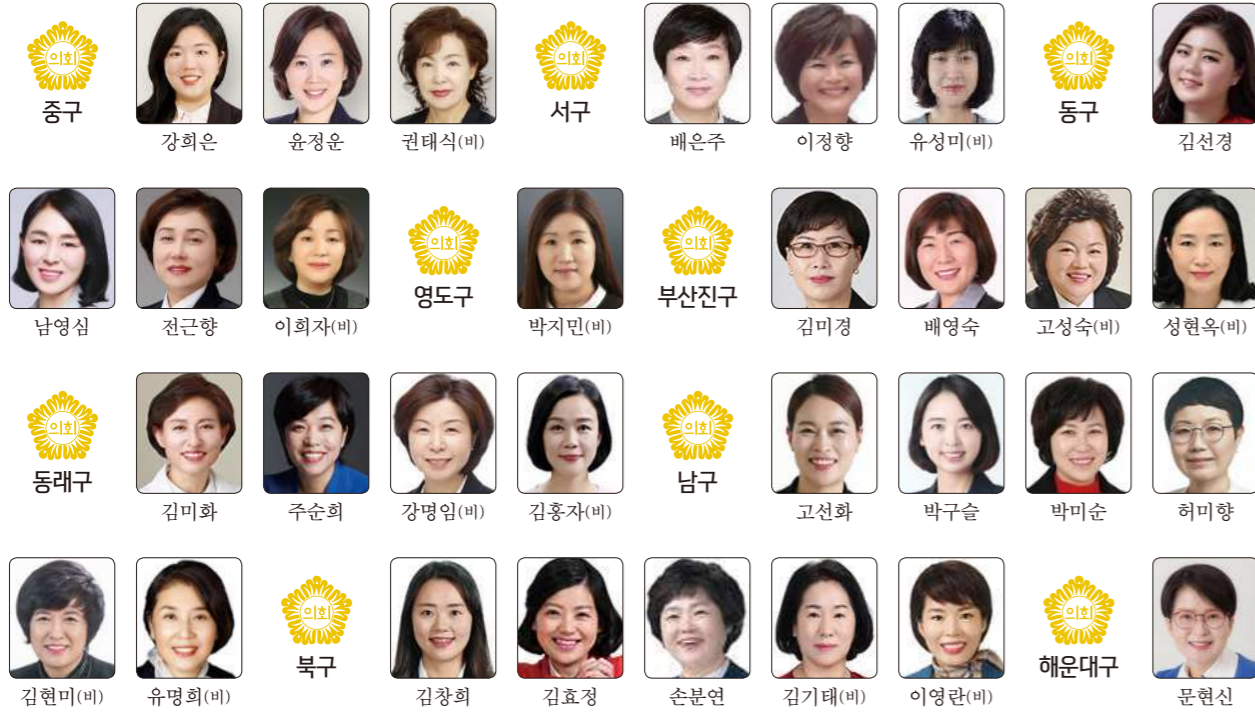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25개 의회]

종로구	유양순	노진경(비)	최경애(비)	중구	이혜영	이화목	김행선(비)	용산구	고진숙
설혜영	이상순	황금선	박미화(비)	이현미(비)	성동구	김현주	남연희	박영희	양옥희
은복실	황선화	이민욱(비)	임중숙(비)	광진구	김미영	문경숙	박삼례	박순복	이명욱
전은혜	박성연(비)	장경희(비)	동대문구	민경옥	신복자	이강숙	이순영	이의안	임현숙
손경선(비)	손세영(비)	중랑구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은승희	장신자	최은주	김미숙(비)
오화근(비)	성북구	노원정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진선아	정혜숙(비)

정혜영(비)	최근용(비)	강북구	김명희	유인에	김미임(비)	최미경(비)	도봉구	고금숙	유기훈
이경숙	이영숙	이은림	이길연(비)	조미애(비)	노원구	장금희	이영구	주연숙	차미중
최윤남	김선희(비)	신동원(비)	이미옥(비)	은평구	권인경	나순애	오덕수	이연욱	정은영
박세은(비)	신윤경(비)	서대문구	김해숙	박경희	이경선	안한희(비)	양리리(비)	마포구	장명숙
권영숙	김영미	이필례	정혜경(비)	최은하(비)	양천구	나상희	윤인숙	임정욱	정순희
임준희(비)	최재란(비)	강서구	강선영	송순효	윤유선	정정희	김현희(비)	이중숙(비)	이충숙(비)
구로구	곽윤희	박중녀	조미향	최숙자	노경숙(비)	이명숙(비)	금천구	윤영희	이경욱
강수정(비)	영등포구	김길자	박미영	박정자	오현숙	정선희	이미자(비)	최봉희(비)	
동작구	강한욱	김용아	민경희	신민희	이미연	조진희	최정아	곽향기(비)	이지희(비)



[부산광역시 16개 의회]



[대구광역시 8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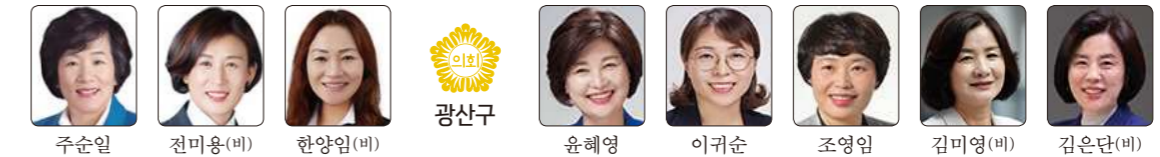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0개 의회]



[광주광역시 5개 의회]



























































































[대전광역시 5개 의회]





























































































[울산광역시 5개 의회]



[경기도 31개 의회]

 수원시	 김미경	 윤경선	 이미경	 이재선	 이혜련	 장정희	 조명자	 조미옥	 최영옥
 황경희	 송은자(비)	 유준숙(비)	 이병숙(비)	 장미영(비)	 성남시	 김선임	 박경희	 박영애	 박은미
 임정미	 김경희(비)	 서은경(비)	 최미경(비)	 한선미(비)	 의정부시	 김영숙	 김현주	 이계옥	 정선희
 조금석	 박순자(비)	 최경희(비)	 안양시	 김선화	 김은혜	 김필여	 박정옥	 이은혜	 이채명
 임영란	 정맹숙	 최병일	 김경숙(비)	 윤경숙(비)	 부천시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박명혜	 박찬희	 양정숙	 이소영	 임은분	 홍진아	 남미경(비)	 박순희(비)	 송혜숙(비)	
 광명시	 이주희	 조미수	 한주원	 김연우(비)	 이형덕(비)	 평택시	 곽미연	 김동숙	 이해금
 김영주(비)	 최은영(비)	 양주시	 안순덕	 한미령(비)	 동두천시	 정계숙	 최금숙	 정문영(비)	
 안산시	 나정숙	 박은경	 주미희	 현옥순	 김진숙(비)	 이경애(비)	 이진분(비)	 고양시	 장경자

 김미수	 김보경	 김효금	 김혜련	 박소정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이윤승	 조현숙
 김덕심(비)	 엄성은(비)	 이혜림(비)	 장상화(비)	 과천시	 고금란	 윤미현	 제갈임주(비)	 의왕시	 윤미근
 이랑이	 전경숙	 윤미경(비)	 구리시	 임연옥	 장승희	 양경애(비)	 남양주시	 박은경	 백선아
 이정애	 김영실(비)	 최성임(비)	 오산시	 김영희	 한은경(비)	 화성시	 박연숙	 신미숙	 이은진
 조오순	 차순임	 공영애(비)	 김경희(비)	 박경아(비)	 시흥시	 송미희	 오인열	 이복희	 안선희(비)
 이금재(비)	 군포시	 성복임	 신금자(비)	 하남시	 김은영	 박진희	 방미숙	 이영아	 김낙주(비)
 파주시	 안소희	 윤희정	 한양수	 박은주(비)	 이효숙(비)	 여주시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한정미(비)	 이천시	 이규화	 조인희	 심의래(비)	 용인시	 김상수	 김희영	 남홍숙	 박남숙
 박원동	 안희경	 유진선	 유향금	 이미진	 이은경	 장정순	 하연자	 명지선(비)	 이선화(비)



[강원도 18개 의회]



[충청북도 11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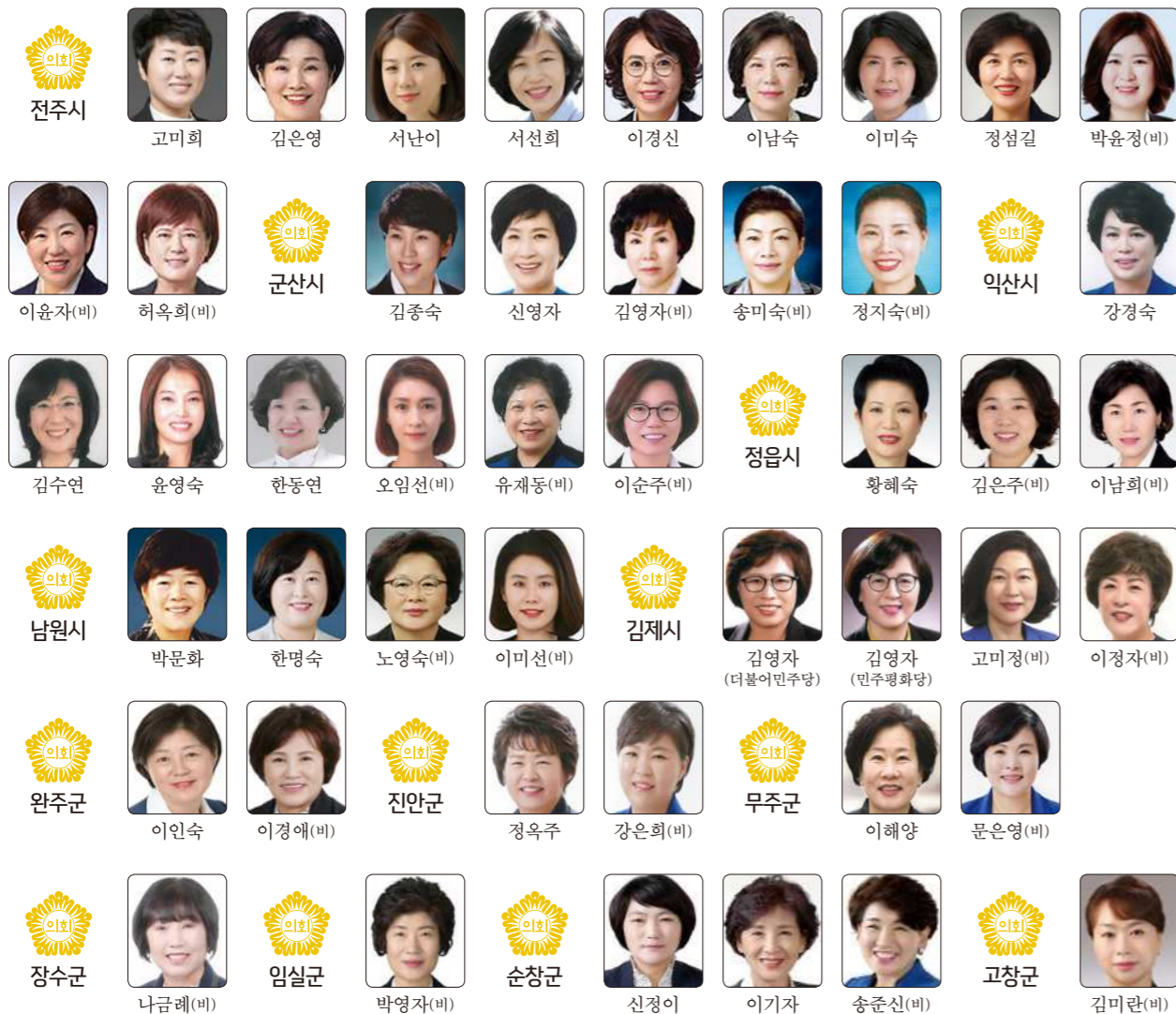


[충청남도 15개 의회]





[전라북도 14개 의회]



[전라남도 22개 의회]



[경상북도 23개 의회]

포항시	강필순	박희정	이나결	이영옥	차동찬	공숙희(비)	권경옥(비)	김민정(비)	김정숙(비)
울릉군	김숙희(비)	경주시	김순옥(비)	서선자(비)	김천시	전계숙	김용숙(비)	박혜수(비)	
안동시	권남희	정복순	배은주(비)	이경란(비)	구미시	김춘남	이선우	이지연	홍난이
마주희(비)	송용자(비)	장미경(비)	영주시	송명애	장영희	김화숙(비)	이서윤(비)	영천시	우애자(비)
최순례(비)	상주시	신순단	신순화	안경숙	민지현(비)	이경옥(비)	문경시	박춘남(비)	
예천군	김은수	신향순(비)	경산시	박미옥	엄정애	이성희	배향선(비)	손병숙(비)	
청도군	김태이(비)	고령군	배효임(비)	성주군	황숙희(비)	칠곡군	한향숙	최인희(비)	
군위군	김정애	홍복순	오분이(비)	의성군	김우정(비)	박화자(비)	청송군	정미진	최갑선(비)
영양군	오창옥	김인숙(비)	영덕군	김은희	오정자(비)	봉화군	김상희	이영미(비)	

울진군	강다연(비)
-----	--------

[경상남도 18개 의회]

창원시	구점득	이해련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박선애(비)	이종화(비)	이현순(비)	최영희(비)
진주시	박금자	서은애	정인후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강묘영(비)	김경숙(비)	김시정(비)
통영시	김미옥	배도수	배윤주	김혜경(비)	이이옥(비)	고성군	이쌍자	김원순(비)	김향숙(비)
사천시	구정화	김경숙	김영애	김여경(비)	김행원(비)	김해시	김명희	주정영	하성자
박은희(비)	허윤옥(비)	밀양시	엄수면(비)	이선영(비)	신금자	최양희	고정이(비)	안순자(비)	
의령군	김봉남	김추자(비)	함안군	김정선	추경자(비)	창녕군	조미련	김인옥(비)	신은숙(비)
양산시	김혜림	정석자	박미혜(비)	정숙남(비)	하동군	강상례	강희순	김혜수(비)	이하옥(비)
남해군	정영란(비)	함양군	임채숙(비)	산청군	정명순	송정덕(비)	거창군	김향란	표주숙



김태경(비)



박수자(비)



합천군



최정옥



신경자(비)



임준지(비)



한국여성의정 참여 안내

한국여성의정은 여러분의 관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읽으신 후 소감과 의견을 전해주시면 다음 호에 반영하겠습니다.

- 흥미 있었거나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 다음 호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를 적어주세요.
- 한국여성의정과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사)한국여성의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2호
우편번호 07233

전화 : 02)784-0531 / 788-3341~2
팩스 : 02)784-0717
이메일 : kwpn2013@hanmail.net
홈페이지 : www.kwpcn.kr

<정기구독 신청>

받는 분 성함 _____
받으실 곳 _____
받을 분 전화 _____
E-Mail _____

정기구독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남녀동수정치로 가는 몇 번째 정거장일까요? 곧 도착할 것 같은 종착역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선거였습니다.

『여성의정』 5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호입니다. 여성당선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1070명(교육감 2명 포함)이 되어 수적으로는 나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성광역단체장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7번 선거에서 단 한 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니 글자 그대로 0점입니다. 기초단체장도 6회선거보다 오히려 1명 줄어든 8명이니 후퇴한 느낌도 듭니다. 아쉬움을 달래준 소식은 2명의 여성교육감 등장입니다. 희망은 이래서 다시 시작됩니다.

세계의 여성정치인 컬럼에 등장한, 라리사 워트스 호주 상원의원이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아이의 아빠가 된 민주당 김혜영 의원과 출산을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의원이 그 사진과 겹쳐집니다.

어느덧 20대 국회가 절반을 돌았습니다. 그간 발로 뚫어 낸 여성국회의원들의 상반기 실적을 실었습니다. 새 임기를 시작한 지역의 여성정치인 모두의 얼굴을 담아냈습니다. 남녀동수정치의 동력이 될 이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더위도 너무 더웠던 2018년의 여름터널을 뚫고 나온 『여성의정』 5호. 뜨거움을 뒤로 한 가을은 선선한 바람으로 더위의 버거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남녀동수정치의 종착역에 닿을 것이라는 가을 같은 선선한 소식이 도착하길 고대합니다. ♡

